

2020 결과집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olicy Roundtable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에 관하여

2020 결과집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Policy Roundtable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에 관하여

• 왜 정책라운드테이블인가?	06
• 그동안 논의된 이야기	07
• 우리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08
• 앞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	10

• 온라인 의제 공유회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

세션 1	재난의 시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과 문화정책 발표 박은선 (리슨투데이시티 대표)	13
세션 2	서울대공원과 동행숲 캠페인 발표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27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실태와 시사점 발표 백선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토론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36
세션 3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점 발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토론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43
세션 4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의 실행을 중심으로 발표 박소현 (서울과기대 디지털문화정책 교수) 토론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49
세션 5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조건과 방향 발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시인) 토론 박소현 (서울과기대 디지털문화정책 교수)	63
세션 6	도시와 예술, 그 안과 밖에서 발표 최도인 ((주)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토론 이원재 ((주)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70
세션 7	재난회복력이 높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발표 박은선 (리슨투데이시티 대표) 토론 백선헌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76
	종합토론	87

- **왜 정책라운드테이블인가?**
- **그동안 논의된 이야기**
- **우리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 **앞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

왜 정책라운드테이블인가?

SFAC정책라운드테이블은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예술분야의 미래가치 논의와 거시적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모아 구성된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그룹이다. 재단 안팎에서 벌어지는 예술현장 이슈와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에 대해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균형 잡힌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체이다.

재단은 논의 이슈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을 초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과 매개자 역할을 진행함으로써 각 현장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전략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 내부 직원의 참여도 진행하고 있다.

정책라운드테이블은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운영체계를 위하여 재단-전문가 그룹-실행 그룹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3단계에 걸친 장기적 운영 방향을 목표로 진행된다. 1단계(2019년도)는 각 분야별 정책위원 구성과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나누고, 2단계(2020-2021년도)는 장기적 전략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제 공유회를 진행하여 정책대안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더한다. 이후에는 담론형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 테이블 운영과 리서치를 통한 사업지표를 개발한다. 3단계(2022년도)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미래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표를 점검하고, 실천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SFAC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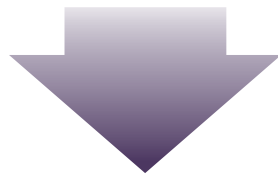


SFAC정책라운드테이블 그룹 구성

강원재	영등포문화재단 대표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대표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다혜	(주)필더필 대표
심보선	연세대학교 교수(문화학)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최도인	(주)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남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우사랑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대리

그동안 논의된 이야기

1차	2020.1.15.(수) 서울연극센터	정책라운드테이블 논의주제 및 모임방식 논의
2차	2020.2.11.(화) (구)동숭아트센터	미래지향 전환적 가치에 대한 페이퍼 공유 및 의사결정사항 논의
3차	2020.6.3.(수) 청년예술청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과 문화정책 주제설정 → 6가지 도출 및 목표설정
4차	2020.6.23.(화) 서교예술실험센터	· 재난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
5차	2020.7.16.(목)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6차	2020.8.10.(월) 서울연극센터	· 평등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 예술계 행동강령 보급, 아티스트피, 예술인 권리보장법 · 포용도시를 위한 예술: 혐오와 차별 철폐
7차	2020.9.3.(목) 화상회의	·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활동 · 도시 재생과 예술의 긴장
8차	2020.9.23.(수) 화상회의	·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예술
9차	2020.10.21.(수) 시민청	·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그 숨겨진 이야기



의제 공유회

<부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

2020년 12월 11일(금), 10:00~15:00

서울문화재단 유튜브 '스팍티비'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다시보기 가능

=> <https://www.youtube.com/watch?v=xcbl0UH0AM>

우리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과 문화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시대는 환경파괴, 도시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서로 긴밀하게 얹혀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런 조건들의 관계성을 진단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 코로나는 타인과의 접촉 속에서 존재하는 예술가들의 창작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미술관은 문을 닫고, 연극 공연과 음악 공연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전시와 공연이 취소되면서 예술계는 허무함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마음 편하게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은 분노나 두려움으로 표출된다. 코로나는 집단적 우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에서는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향해 적대적 행동을 하는 일이 있었고, 유럽이나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아시아계 주민들이나 이민자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했다. 코로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도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이 늘어났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2020년 2월~4월 사이 40%가량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취약계층은 장애인과 집단 거주시설(요양원, 정신병원 등) 거주자들이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망자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집단 거주시설에 머물던 이들이다. 우리나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청도 대남 정신병원에서 11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왔으며 7명 이상이 사망했다. 서울의 장애인 시설인 신아원에서도 코로나가 집단 발병했으나 근본적인 탈 시설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FAC정책라운드테이블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동시대의 예술가들과 문화 기획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코로나 이후의 예술과 문화는 코로나 이전의 것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요소는 환경, 사회적 경제, 평등이며, 문화와 예술이 도구가 아닌 매개체가 되어 삶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확인했다. 참여자들은 9차에 걸친 온·오프라인 모임과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전환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서 전환이란 단순히 A에서 B로의 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변화를 말한다. 구성원들은 장기간의 토론 끝에 2020-2021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과 문화정책 논의 주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1.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2. 재난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 예술 역량
3.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장애인 등 소수자 예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
4. 평등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 예술계 행동강령 보급, 아티스트 피(artist fee), 예술인 권리보장법 등
5.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 예술: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 활동, 도시재생과 예술의 긴장
6. 포용 도시를 위한 예술: 혐오와 차별 철폐
7. 전환을 위한 예술 문화지표 수립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혐오와 배제,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민주성 그리고 재난이었다. 소수자의 문화를 주류의 문화에 억지로 포섭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박선훈, 최혜자, 최선영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는 포용적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혐오와 차별은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도 연결되는데 때론, 정책이 지나치게 문화 다양성을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안이영노는 서울대공원의 동행 숲 사례를 통해 생태적 고민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강원재, 이원재, 최도인은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하면서 세운 도시재생, 문래 도시재생 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지역 정체성의 위기, 도시재생의 한계를 토론했다. 박소현, 박은선은 예술가의 내적 조건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평등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다. 박은선은 여성예술인연대에서 개발한 행동강령 사이트를 소개하며 예술계 성폭력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했고, 박소현은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계약 문화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심보선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과연 평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선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다.

또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논의를 모아 대외적으로 공론화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를 주제로, 온라인 의제 공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고, 참여자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의 현장성과 구체성을 더하였다.

앞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

SFAC정책라운드테이블은 수차례 모임과 토론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할 만한 과제들도 생각해 보았다.

- 첫째. 문화예술(기관) 전환가치 역량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 둘째.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미래 예측(Forecasting) 연구 및 워크숍
- 셋째. 전환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주제 온라인 국제회의
- 넷째. 지자체·재단 간 공유 및 중앙정부로 문화예술 정책 제언
- 다섯째. 전환도시를 위한 문화 예술 선언

SFAC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 앞으로 생각해야 할 과제는 첫째,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예술정책 전환 또는 전환가치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및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책·제도·사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의 문화예술에 대한 예측을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전환도시를 위한 문화와 예술의 역할에 대하여 국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공통적인 이슈와 지역 이슈를 발굴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한 결과 및 문제의식을 지자체·문화재단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문화예술 정책을 제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종합하여 포스트코로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적 가치 이행 선언을 함께 준비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SFAC정책라운드테이블은 이러한 과제들을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임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의제 공유회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

세션 1

재난의 시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과 문화정책

발표

박은선 (리슨투데이시티 대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연구실 연구원)

재난의 시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 서울문화재단 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능력 평가

박은선

1. 들어가며

재난의 시대는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레이철 카슨은 1962년《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농약과 살충제가 새의 체내에 축적되면서 새의 알껍질을 얇게 하고 새의 출생률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Carson, 2002). 당시 이 책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간 문명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고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미 60년대부터 환경재난, 차별과 혐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문명의 성쇠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논지 하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환경과 젠더, 인종 문제는 늘 경제 문제에 밀려 부차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Bee et al., 2015; Young, 1988).

COVID19 사태에서 보듯 환경파괴는 재난을 가져왔다. 숲이 파괴되면서 깊은 산림에서 야생동물에 기생해 야 하는 바이러스가 도시 사람들에게 옮겨갔고, 결국 단 하루도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만약 COVID19 사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점이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듯 하지만 그 피해는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중된다(Beck, 1992; Cutter et al., 2003; Peek and Stough, 2010). 인도양 쓰나미 사건만 보아도 여성들이 종교 때문에 남성들이 점거 중인 대피소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구하느라 혹은 나무에 오르지 못하거나 수영을 하지 못해서 남성에 비해 2배~3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였다. 인도 타밀나두 지역 Nagapattinam 구역의 경우, 남성이 1,883명 사망한 것에 비해 여성은 2,406명이 사망하였다. Cuddalore 구역에서는 남성이 146명 사망하고, 391명의 여성이 사망하였다. 이 지역들의 여성의 사망률은 거의 75%에 달했다(Juran, 2012). 스리랑카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이 증가했다(Fisher, 2010).

미국에서 1천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카트리나 사망자의 65% 이상은 노인들이었다. 로힝야 난민은 변변한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500만 명이나 몰려 살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회복 도시 인터뷰, 2020).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미야기 등 해안가 지역에서의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에서 4.5배가량 높았다(Japan Disabilities Forum, 2015). 환경파괴, 재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하나라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일상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재난은 더욱 강하고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다.

2. 지속가능성과 예술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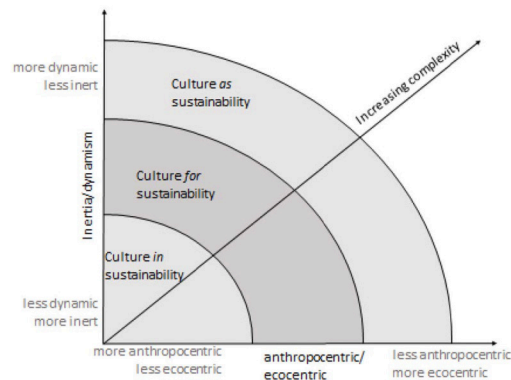
그렇다면 재난 사회에서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기둥은 환경, 사회적 경제, 사회정의(평등)이다(Elkington, 2004).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치들이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속가능성 개념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자연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세대 안에서의 공정한 분배(intragenerational equity)뿐만 아니라 후대 세대를 위한 분배까지(inter-generational equity)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Igor Vojnovic, 2014).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le transition)이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가치 지향을 명확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뜻하는 혁신(innovation)과 전환은 이러한 점에서 존재론적으로 다르다(송위진, 2012). 포스트모던의 시대에도 환경적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새로운 가치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되었으나(Harvey, 1992; Young, 1988), 2020년을 사는 우리 사회의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은 이러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듯하다.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자연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으며(Guattari, 1989) 여성의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프레이저, 2017).

예술이 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술의 도구화를 주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은 역사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적이 없었다. 다만 예술작품이 사회와 분리될 것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예술이 존재했을 뿐이다(랑시에르, 2008). 현대 예술과 문화의 가치는 억압이 만든 침묵을 깨뜨리고 묵이 없는 존재들을 드러내는 데 있으며, 그 호명하는 행위가 역동성을 만들어낸다. 예술과 문화는 사회 문맥의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예술은 일상의 감각을 바꾸고 가치를 변화시키는 잠재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Packalén, 2010).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공동체를 와해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그 관계는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졌으며 물리적 접촉은 희미해졌다(Putnam, 2001). 현대의 예술과 문화는 물리적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 시점에 전통적, 사회적 자본을 대신하여 타 문화와 타 지역에 사는 누군가와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Upright, 2004). 이 끈은 복잡하고 넓게 얽힌 취향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느슨하게 감정을 이어주기도 한다(O'Neill and Gidengil, 2013). 그런데 이 유대감은 종종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행사하면서 생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계화하고 서열화하면서 느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제1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들, 여성들, 다른 몸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동질감을 가지기도 한다. 그런 사회에서 예술과 문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권력을 가진 소수의 도구가 될 뿐이다(Sandercock, 2000). 이런 배경에서 평등하면서도 남을 억압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른 종류의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Young, 2002, 1986).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며, 예술과 좁은 의미의 문화 영역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oini and Dessein, 2016). Packalén는 지속가능성은 전체 사회에서 문화적-전환이자 창조적 과제로 인식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또한 예술과 문화의 잠재력은 미래를 형성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Packalén, 2010). 지속가능성과 예술에 대해 연구해온 카간에 의하면, 예술가는 지역 사람을 다른 예술가와 다를 바 없이 존중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환경에 대하여 급진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Kagan and Hahn,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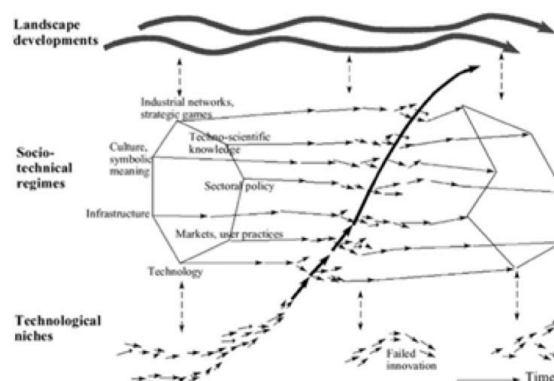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성과 문화와의 다양한 의미적 층위 (Soini and Dessein, 2016)>

3.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과 문화

사회 기술전환론(Socio-Technical Transition)에서 ‘전환(transition)’은 시스템전환(system transition),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 현상을 다루는 연구를 전환연구(transition studies)라고 한다(송위진, 2013). 이 논의는 우리가 접하는 사회문제가 현재 사회 기술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며, 현 사회 기술시스템에서의 개선활동으로는 근원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파악한다.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활동방식, 하부구조, 시장으로 구성된 사회 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생태적, 사회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치중립적인 기술혁신론과는 차별점이 있다(송위진, 2013).

사회 기술시스템의 변화는 평면적 국소적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의 다층적 관점(Multi level perspective of technological change)의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Geels & Kemp, 2006; Rip & Kemp, 1998). 이 다층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가 이 레짐을 바꾸는 중요한 한 기둥이라는 점이다. 즉 기술은 국소적 실험인 니치(Niche), 국가 정책이나 사회 주류인 레짐(Regime), 지구적 수준의 경관(Landscape)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한 세대(20~3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진화한다. 사회 기술전환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가치인 ‘환경’, ‘평등(젠더, 장애, 인종, 빈부격차, 노약자)’,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과 문화도 포함된다(Jan Rotmans et al., 2001). 즉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고민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 모델과 거버넌스 모델에서 간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도 고민한다. 특히 사회 기술전환론은 이해당사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 중간 지원자(intermediary)의 역할을 강조하고 환류(feedback), 미래예측 forecasting)의 과정을 중시한다(Geels, 2005, 2011; Hargreaves et al., 2013; Wolfram, 2015a).



<그림2. A Dynamic multi-level perspective of STS. (Geels, 2002)>

4.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 예술 평가 지표 구축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 예술정책이 지속가능성과 전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추상적 주장이 아닌 세부적 목표와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창조도시, 전환역량 평가 요소를 총합하여 지속가능한 전환 문화 예술정책 평가 지표를 구축하고자 한다.

1	포용과 다양한 형태의 도시 거버넌스 Inclusive and multiform urban governance	참여와 포용 Participation and inclusiveness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Diverse governance modes and network forms
		지속성 있는 중간 매개자와 교류 Sustained intermediaries and hybridization
		전환 역량에 기반한 기관 기업 정신 Transformative institutional entrepreneurship
2	전환적 리더십 Transformative leadership	
3	역량을 갖춘 자치 공동체 Empowered and autonomous communities of practice	사회적 요구와 동기 부여 Addressing social needs and motives
		지역사회 역량강화와 자치 Community empowerment and autonomy
4	시스템 인식 및 아카이브 구축 System(s) awareness and memory	기준선 분석(문제인식) 및 체계 인식 Baseline analysis and system(s) awareness
		경로 의존성에 대한 경계 Recognition of path dependencies
5	도시 지속가능성 예측 Urban sustainability foresight	
6	진보적 지속가능성 변화에 대한 집단적 비전 Collective vision for radical sustainability changes	
7	혁신 역량 강화 Innovation embedding and coupling	역량개발을 위한 자원 Access to resources for capacity development
		전환 수행을 위한 계획 Planning and mainstreaming transformative action
		변화를 지지하는 제도 Reflexive and supportive regulatory frameworks
8	반영성과 사회적 학습 Reflexivity and social learning	
9	개인, 가정, 사회, 기관의 수준을 포괄하는 역량 강화 Working across human agency levels	
10	지역적 스케일과 정치-행정을 뛰어넘는 정책 Working across political-administrative levels and geographical scales	

<표1. 도시전환 역량평가 요소 Conceptual framework for urban transformative capacity (Wolfram, 2015b)>

-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 Goal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표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국가 지속가능발전 포털, 2019)>

- 1. 강력한(급진적인) 환경적 지속가능성 추구
- 2.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의 사람을 존중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책임을 지는 예술
- 3. 나의 예술 행위에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문화 예술
- 4.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문화 예술
- 5. 포용적이고 반 차별적인 문화 예술
- 6. 예술가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

<표3.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목표 (Kagan and Hahn, 2011)>

지향가치	세부항목	근거
예술가 역량 강화	예술가 역량 지원 예술 인프라 지원	SDGs 3, 전환가치 7, 9, 창조도시 6
환경 정의	환경 정의 추구	SDGs 6,7,13,14,15, 전환가치 6, 창조도시 1
재난 회복력	재난 회복력 향상	SDGs 2,3,6,7,11,13,14,15, 전환가치 6, 창조도시 1
사회 정의	1. 젠더 평등 2. 장애 차별 금지 3. 어린이, 노인 문화 참여 4. 인종, 성소수자 차별 문제 해결 5. 저소득층 문화 혜택 확충 6. 문화적 다양성 확보	SDGs 5, 전환가치 6
		SDGs 4, 8, 10, 16, 전환가치 6
사회적 경제	1. 민간에 의한 예술 지원 2. 지역발전과 예술	SDGs 3, 전환가치 7, 9, 창조도시 4, 6
거버넌스	1.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2. 중간 지원자의 역할	SDGs 4, 8, 10, 16 전환가치 1, 6
지역	1.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의 사람을 존중 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책무	전환가치 3, 창조도시 2,3
미래예측 (foresight)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	전환가치 5
문제 인식 및 환류	1. 기준선(Baseline) 분석 2. 피드백 계획 수립 3. 평가 반영	전환가치 4, 8

<표4. 지속가능한 전환 문화 예술정책 평가 지표>

5. 서울문화재단 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역량 분석

5.1.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역 량 강 화	환 경 정 의	재 난 대 응	젠 더	문 화 다 양 성	사 회 적 경 제	취 약 계 층	거 버 넌 스	지 역	미 래 예 측	환 류 확 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장		•										
	공연단체												
예술기반 지원	창작준비지원 RE: SEARCH		•										
	공 간 지 원	창작작업실 · 연습실 지원	•										
		예술공간 지원	•										
	연 구 지 원	예술전문서적발간 지원	•										
		예술현장연구모임 지원	•										
	기 록 지 원	시각예술중견작가 작품집발간 지원	•										
		우수예술작품기록 지원	•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정기공모			•										
2020년 시민청 시민공모사업			•										
2020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										
2021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_예술로 놀이터			•						•		•		
생활문화전문인력양성			•										
생활문화 공간 지원사업 (생활문화지원센터)			•										
제7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										
일상예술 역량강화사업			•										
일상문화 탐색지원사업			•										
위댄스캠프			•										

지원사업명	년 량 강 화	환 경 정 의	재 난 대 응	젠 더	문 화 다 양 성	사 회 적 경 제	취 약 계 층	거 버 넌 스	지 역	미 래 예 측	환 류 확 산
위무브	•				•						
예술치유 기획프로그램	•		•								
서서울예술교육센터_2020 예술놀이LAB	•						•				
서서울예술교육센터_2021 예술놀이LAB	•						•				
삼각산시민청 공간지원사업	•								•		
인디음악생태계활성화사업 <서울라이브>	•				•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多کم>	•				•						
쉐어 프로젝트 <실험실>	•										
문학웹진 《비유》 '하다' 프로젝트 공모	•								•		
2020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2분기 단기지원	•								•		
2020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3분기 단기지원	•								•		
2020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4분기 단기지원	•								•		
2021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정기공모	•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						•		•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						•				
현대연희 창작작품 지원사업	•										
아리랑 문화 세계화 지원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										
서울시민예술대학	•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								•		

유망예술지원사업			•									
2020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 지원사업			•									
2020 기예/이론 워크숍 '점핑업(Jumping UP)'			•									
2020 유망예술가 양성 교육과정 '서커스 펌핑업(Pumping UP)'			•									
2020 서커스 1일 가족캠프			•									
2020 유망예술가 양성 교육과정 '거리예술 넥스트(NEXT)'			•									
2020 거리예술 주제워크숍			•									
2020 거리예술 카라반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예술단체		•									
	기업	후원예정인 예술단체가 있는 경우										
		후원예정인 예술단체가 없는 경우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 소소한 기부			•					•				
2021 신당창작아카데미드 12기 입주작가 정기공모			•							•		
2020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사업			•									

<표5.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역량 분석>

5.2. 운영사업

분류	사업명	규모 강화	환경 정의	재난 대응	젠더	문화 다양성	사회 적경제	취약 계층	거버 넌스	지역	미래 예측	환류 확산
예술 교육	서울형 교육예술가 (TA)	•										
	어린이, 청소년 학교예술교육	•						•				
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	New AiE: 예술교육 창작과정	•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NewSEW)	•										•
	서울형 예술교육 방법론 확산 및 공유	•										•

재난의 시대,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 서울문화재단 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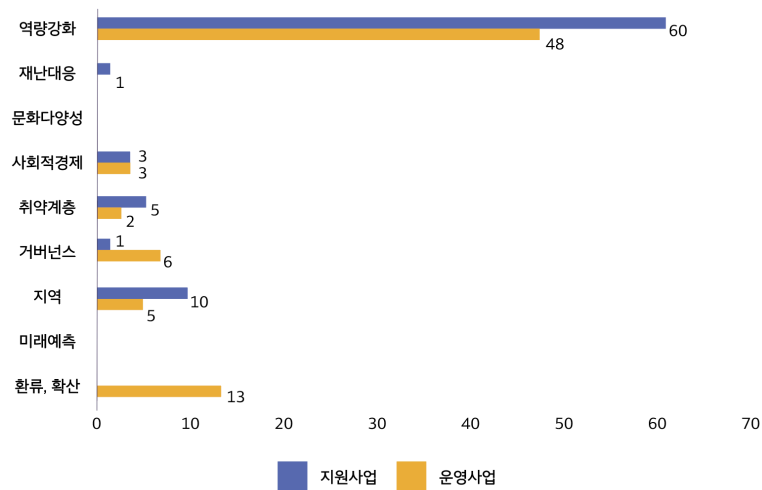
분류	사업명	역량 강화	환경 정의	재난 대응	젠더	문화 다양 성	사회 적경 제	취약 계층	거버 넌스	지역	미래 예측	환류 확산
	서울형 예술가교사 (TA) 역량강화	•										
예술 교육	서울예술교육포럼	•										•
	서울국제창의예술 교육심포지엄	•										•
	서울국제창의예술 교육심포지엄	•										•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지역 특성화 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예술교육 정보자료관	•										•
	서울시민예술대학	•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프로젝트 지원사업	•							•	•		
서울의 거리예술	서울거리예술축제	•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										
	거리예술-서커스 전문인력 양성	•										
	서울시 대표 B-Boy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상상력발전소	•										
	스토리&아카이브	•										
서울의 문화나눔	문화누리카드	•						•				
서울축제 지원센터	서울시 축제 평가	•										•
	축제멘토링 지원사업	•										•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	•										•
	축제 워크숍 서울축제포럼	•										•

분류	사업명	역량 강화	환경 정의	재난 대응	젠더	문화 다양 성	사회 적경 제	취약 계층	거버 넌스	지역	미래 예측	환류 확산
달리는 문화철도	공공예술 프로그램	•								•		
	아트스테이션	•										
생활문화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	•							•	•		
	생활문화 지원센터	•										
	서울생활예술 오케스트라축제	•										
	생활예술 춤 활동기반조성	•										
	동아리 네트워크	•										
	생활문화캠페인	•										
	시민 일상예술 네트워크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			
	생활예술매개자 (FA)	•										
제휴 정책 교류	예술제휴						•					
	비즈니스&아트						•					
	예술가치 확산 캠페 인: 후원 프로그램						•					•
문화정책	광역문화재단 네트워크	•							•	•		
	문화정책위원회	•							•			•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										•
	문화정책패널 운영	•										•
국제교류	공간기반 교류사업	•								•		•
	도시 간 문화교류	•								•		•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										•
	아시아도시문화 포럼 ACCF	•										•

<표6. 서울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역량 분석>

구분	역량 강화	환경 정의	재난 대응	젠더	문화 다양성	사회적 경제	취약 계층	거버넌스	지역	미래 예측	환류 확산
지원 사업	60		1	0	0	3	5	1	10	0	0
운영 사업	48			0	0	3	2	6	5	0	13
계	108	0	1	0	0	6	7	7	15	0	13

<표7. 서울문화재단 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역량 분석>



<표8. 서울문화재단 사업 지속가능한 전환 역량 분석 그래프>

위의 도표에서 보듯 현재 재단의 사업은 역량강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젠더에 관한 내용이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류, 확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재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환의 가치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가 아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연구모임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안하였다.

2020-2021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예술과 문화정책 논의 주제

1.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2. 재난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 예술 역량
3.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장애인 등 소수자 예술 인프라 접근성 향상
4. 평등하고 공정한 창작 환경: 예술계 행동강령 보급, 아티스트 피(artist fee),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5.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문화 예술: 안티 젠트리피케이션 문화 활동, 도시재생과 예술의 긴장
6. 포용도시를 위한 예술: 혐오와 차별 철폐
7. 전환을 위한 예술 문화지표 수립

최종 목표 - 논의 사항

첫째. 문화 예술 전환 역량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둘째.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미래 예측(Forecasting) 워크숍
 셋째. 전환도시를 위한 문화 예술의 역할: 국내 혹은 국제 온라인 간담회
 넷째.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문화 예술정책 제언
 다섯째. 전환도시를 위한 문화 예술 선언

참고문헌

- Geels, F.W., 2011. The multi-level perspective on sustainability transitions: Responses to seven criticisms.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1, 24-40. <https://doi.org/10.1016/j.eist.2011.02.002>
- Geels, F.W., 2005. The dynamics of transitions in socio-technical systems: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transition pathway from horse-drawn carriages to automobiles (1860-1930).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7, 445-476. <https://doi.org/10.1080/09537320500357319>
- Hargreaves, T., Hielscher, S., Seyfang, G., Smith, A., 2013. Grassroots innovations in community energy: The role of intermediaries in niche development.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 868-880. <https://doi.org/10.1016/j.gloenvcha.2013.02.008>
- Jan Rotmans, Rene Kemp, Marjolein van asselt, 2001. more evolution than revolution: transition management in public policy. *foresight* 3, 15-31.
- Kagan, S., Hahn, J., 2011. Creative Cities and (Un)Sustainability: From Creative Class to Sustainable Creative Cities. *Culture and Local Governance* 11-27. <https://doi.org/10.18192/clg-cgl.v3i1.182>
- Soini, K., Dessein, J., 2016. Culture-sustainability relation: Towards a conceptual framework. *Sustainability* 8, 167.
- Wolfram, M., 2015a. Seongdaegol Living Lab: Conception and first steps.
- Wolfram, M., 2015b. Conceptualizing urban transformative capacity: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Cities*. <https://doi.org/10.1016/j.cities.2015.11.011>
-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털, 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 포털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종합 정보 시스템 [WWW Document]. URL <http://ncsd.go.kr> (accessed 6.2.20).

세션 2

서울대공원과 동행숲 캠페인

발표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전 서울대공원장)

동행숲 캠페인을 통해 본 문화다양성

안이영노

이질성의 공존

‘동행숲’은 멸종위기 서식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 캠페인이다. ‘동물이 행복한 숲’의 줄임말이며, 시민이 동행하여 숲을 회복하고 사람들도 생태계 보존을 통해 치유를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대공원의 숲과 동물원 문제에서 비롯되었기에 멸종위기 동물의 종 보전과 생명 다양성, 동물원 시설 개선, 도시공원과 숲 보전 등을 다룬다. 또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이므로 기후변화 대응, 반려동물 문제, 산림 치유, 도시의 경관보전, 도시공원의 시민활동 등 다양한 생태계 이슈를 다룬다. 참여하고 발표하는 사람에 따라 에너지 저감, 탄소발자국, 업사이클링 아트, 시민정원사 활동, 숲길 안내와 식물해설, 개발을 최소화하는 조경, 도시농업, 유기농과 식품안전 문제, 밀렵과 난개발 억제 등을 통한 야생동물 생존 위험 감소, 농촌의 전통문화유산 보전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캠페인 모임의 이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야생동물 구조, 토종동물의 보호 이슈, 동물원 포획동물의 서식지 재도입, 전통농업 유산, 적정기술, 메이커운동, 바다 쓰레기 제거, 오존가스, 친환경 기술과 환경친화적 제품의 이용, 착한 소비와 윤리적 소비, 사회적 소비와 공정 소비의 실천을 통한 전환도시 만들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질적이고 복합적인 이슈가 공존하고 있다. 치명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구를 살리자는 캠페인 하에 이런 의견과 주장, 저마다의 실천들을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하는 모임이 매주 열린다. 참여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며 만남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내가 서울대공원을 나온 이후 동행숲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느낀 놀라운 점은, 차이를 인정하는 ‘게임 룰’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언어를 쓰면서 자기 스스로도 인정받겠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선린과 우정을 강조하는 향약, 즉 ‘마을약속’ 등을 통해 이 모임이 더 큰 고을로 커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행숲 캠페인을 좋아했다. 타인의 작은 실천을 소중하게 여기고, 발표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값진 활동에 고마워했다. 또한 지구를 살리고 서식지를 보전하려는 사람의 이야기를 칭찬할 때 자신의 이야기도 경청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두가 품격을 갖게 된다고 여기는 듯 했다. 그래서 원탁에 몇 번 앉게 되면 선의를 가지고 이러한 ‘룰 플레이’를 기꺼이 해주는 것 같다.

차이의 인정

이런 분위기는 나를 비롯하여 동행숲 캠페인을 만든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지구를 살리기 위해 동물원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개방적인 대화의 장, 공개적인 사교의 장을 갖자는

식의 유연한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탄력적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습속을 빠르게 창출해낼 줄은 몰랐다. 대화의 예의를 지키며 융통성 있게 저마다의 분산된 생각을 즐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는 했었다. 그러나 다른 정보를 공유하면서 늘어나는 학습량과 쌓인 지식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듯 느껴지는 대화의 분위기에 만족스러워 할 것이라든지, 더욱이 자신의 저녁시간까지 내어 이 모임에 올 것이라는 점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참여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서식지 보전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해나가는 시도에 동의해줄 것이라고는 짐작했다. 하지만 캠페인보다는 매력적인 다른 존재들과의 만남 그 자체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길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살리는 인류의 과제, 서식지를 보전하는 캠페인 주제보다도 동행숲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만남의 장, 모임의 나날 그 자체에 주목하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모임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가 있나요?” 이것이 동행숲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 이러한 만남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역시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만나면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나요?” 그리고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모이는 일이 지속되나요?”, “동물원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들만 만나는 것이 아닌데 토론이 되나요?”, “메이커와 예술가, IT기업의 대표, 사회복지사, 광고인, 여행가가 모여서 동물보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나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분명하다. 모임이 너무나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예상한 대화는 두 시간 반, 세 시간을 훌쩍 넘긴다. 또한 다섯 명이 오든 삼십 명이 오든 그 대화의 장은 마치 살롱과 같이 풍요롭게 이어지고, 원탁에 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소위 ‘가성비가 높은 흡족한 모임’이란 생각을 한다. 모인 이들 사이에 어떤 구속감도 없지만, 만난 사람들은 결속감을 갖고 헤어진다. 직업, 직종, 직능이 다양하고 사회적 관심 주제도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만났지만, 서식지 보전과 지구 살리기에 대해서 크게 한 방향을 보고 하나의 가치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자부심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확인하고 간다.

결국 동행숲 캠페이너들이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외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행동들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동행숲 캠페인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아니 그 존재 자체에 주목한다. 그들은 드디어 그동안 혼자 강하게 주장하고 힘을 주어 변호해야만 했던 내 생각들과 동기들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동행숲의 만남에서 자신의 실천과 일상에 대해 발언하고 공유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관용의 규칙이 형성된다. 포용은 지켜야 할 윤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역할이 되는 느낌이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순간이 온다. 차이와 개성을 멋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정서가 대화의 질서로 자리 잡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임의 분위기가 어떻게 성립되느냐에 따라 태도를 바꾸어 다른 사람을 대한다. 특별히 다양성을 존중하거나 배제없는 포용이 중요하다는 식의 윤리를 강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자신의 자세를 다듬는다.

개성의 존중

동행숲이라는 모임은 각양각색 다채로운 사람들의 만남이다. 서식지 보전과 지구살리기 캠페인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췄기 때문에 모임이 활성화되었다. 하나의 묶음이 되지 않도록 일부러 개방하고 공개하는 대신 모듬을 자주 만들었다. ‘대화가 있는 저녁’을 표방하면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모이다 보니, 동행숲 캠페인을 위해 모이는 저녁시간의 살롱 그 자체가 지명도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동행숲 캠페이

너들은 대화의 장을 잘 만드는 존재들이 되었다.

개더링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며 모여야 한다. 동시에 개더링을 잘 해나가려면 지나치게 목적의식을 강조하지 않아야 한다. 동행숲 캠페인의 좋은 취지가 과잉되게 의도하지 않았으며, 대화에서 이슈들이 진지하기는 했으나 원탁에 앉았을 때 너무 강하게 아젠더를 잡지 않는 분위기였다. 서식지와 지구, 야생동물과 동물원, 숲과 바다, 도시와 기후라는 이슈는 분명하지만, 그날의 토픽은 발표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매번 카멜레온처럼 변했다.

지구를 살리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캠페인의 목표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도대체 동물원 제도를 폐쇄하기 위해 모이자는 것인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모이자는 것인지 캠페인의 과제를 모를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개더링이 나왔고 다각화된 주제를 동시에 다루는 전례 없는 캠페인이 어렵지 않게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원탁에 앉았다. 예산 없이 이뤄져야 하므로 각자 커피값을 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살롱을 찾지만, 지구를 살리는 관점과 서식지를 보전하는 시각과 대화를 나누는 개인의 관점은 언제나 반복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 있지만 대신 행동은 꾸준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힘이다. 이런 기준으로 저녁 시간의 대화는 움직였다.

동행숲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화다. 공론화를 해나가려고 꾸준히 모이는 원탁의 소통이다. 동물원 폐지 문제, 훼손된 서식지 문제, 지구의 위기와 기후변화, 도시화와 오염에 대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또 동물원에 문제점과 대체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점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리 정돈하는 것보다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분석이나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사색할 수 있도록 토론부터 자주 해야 한다.

사람은 결론을 내지 않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저마다 다른 경험과 실천을 했던 매력적인 존재를 만나는 식의 독서가 필요하다. 이른바 사람이라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있을까. 그것도 한 번에 여러 명의 ‘사람책’을 한 자리에서 읽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대화가 있는 저녁은 늘 성공했다. 그 시간을 쓰고 간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을 느꼈다.

자원성과 다원성의 확인

사람들은 “동행숲에 회원이 있나요?”라고 묻는다. 없다. “이렇게 잘 되는데 동행숲 재단을 만들지 그래요?” 하고 제안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집단화가 중요한 때 조직화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인위적인 것은 힘을 잃는다. 재단 법인을 만들면 그 단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쏟느라 정작 중요한 동행숲 캠페인에 정성을 쏟지 못할 것이다.

기관을 만들면 사업을 과제로 여기며 밀고 나가게 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활동은 없어지기 쉽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동행숲 캠페인을 할 때 사람들 역시 가장 자유로운 상태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서 적극성이 나온다. 참여가 늘고 자발성도 생긴다. 작지만 깊이 만나던 커뮤니티가 느슨하지만 넓은 네트워크로 확장된다고 느껴질 때는 기관 단체 같은 조직을 만들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실제로 교류하고 협력할 때다.

역지로 단단한 ‘우리’를 만들지 않고, 들고남이 편한 ‘무리’를 짓고, 어떤 이야기도 수용할 수 있는 ‘누리’를 만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얇은 ‘두리’를 친다. 이것이 동행숲 캠페이너들이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

을 일로 여기지 않고, 원탁을 즐기고 대화를 누릴 정도로 해내자고 했다.

동행숲 캠페이너들은 그날 저녁 살롱의 마담이 된다. 스스로 개더링을 즐기고, 사람들을 서로 소개해 주는 대화의 진행자가 된다. 원탁의 일정을 짜고, 좋은 사람을 초청하며, 가벼운 발표와 편안한 토론 시간을 진행하는 이들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동행숲 링커라고 불렀다. 이러한 매력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를 2배, 3배, 4배 늘려 나가는 것이 바로 동행숲 캠페인이다.

동행숲은 입소문 마케팅이다. 구전으로 퍼져가는 브랜드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고 사람이 사람을 데려온다.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루에도 여러 곳에서 저마다 다른 동행숲 살롱이 열리기를 꿈꾼다. 개더링 안에서는 만난 서로가 배려하고 모인 모두가 존중하는 동행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럴 때 비로소 멸종위기 동물과 죽어가는 나무, 숲, 산의 동행자가 될 수도 있다.

개방성과 공개성

동행숲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벌어지는 원리를 ‘미련하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적용해 보는 일종의 실험이다. 생태계 훼손에 비해 시민들의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문제의 원인에는 공감대 확보와 공론장 형성이 잘 안 된 점이 가장 크게 적용한다고 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다시 말해 해결책이 무엇인가. 공감대를 확대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고 공론장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동시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해답이라고 여겼고 실험실에서 동행숲 캠페인을 만들었다.

미분적분이 전해주는 진리처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꾸준히 쌓아 나가고 있다. 지구를 살리는 거창한 일을 계획하면 작은 실천들을 먼저 해야 한다. 때로 반복하고, 때로 번복하며, 또다시 반복한다. 대화를 나눌 문제 거리, 주제, 해결해야 하는 과제 따위는 집중하기보다 분산한다. 작고 다채롭고 색깔이 분명한 토론이 동시에 발로 여러 곳에서 열린다. 제대로 융합하려면 먼저 분산부터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더링, 살롱, 원탁, 대화를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없이 자발적으로, 쉽게 만들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저녁마다 자주 즐겨보자. 만나는 사람들, 모여서 나누는 생각들 자체를 누려보자.

차근차근 느리게 나아가지만 언젠가는 그 사회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이다. 서식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좋아지고 지구를 살리자는 의식도 확산될 것이다. 오프라인의 살롱, 개더링이 잘 되면 더불어 온라인의 콘텐츠와 미디어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서식지 보전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행숲의 가설이었다. 동행숲 캠페인은 일종의 ‘리빙랩’, 다시 말하면 응접실의 반상회 같은 생활 속의 실험실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집단지능을 통해 지식을 학습하고 지혜를 찾아 연구한다. 이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지능으로 사회문제를 공동 해결하는 하나의 사회실험이다.

동행숲은 협업을 통해 사회적 결핍을 해결하려는 리빙랩 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가설에 따라 검증이라도 하듯 확인된 것이 있다. 바로 5년 넘는 살롱과 개더링을 하면서 동행숲 커뮤니티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동행숲 네트워크이라는 방식이 여론 선도자들에게 마케팅된 것이다. 동행숲 캠페인이 영향력을 얻기 이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동행숲의 접근법과 방법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특이와 혼종의 수용

대화에서는 한 사람이 많은 발언 시간을 갖지 않는다. 발표자도, 발제자도 15분을 넘지 않는다. 하루에 여러 명이 발제하며, 발제문을 글로 써서 읽는 경우도 없다. 발표물을 만들어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듯 원탁에 앉아 사람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기를 권한다. 지정 토론자를 정하는 딱딱한 방식은 쓰지 않는다. 정해진 발제자가 있으나 이는 모든 참여자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발표시간을 많이 점하지 않는 패널토의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정한 발제자가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패널이 아예 없이 모든 참여자가 토론하는 원탁토의에 해당한다.

모두가 입을 열수 있도록 최대한 발언시간을 분할한다. 서로 살아온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발표할수록 발언보다는 경청을 하게 된다. 생태계 문제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하면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가 암묵적인 약속이 되고, 동행숲의 전통을 창발해 나갔다. 또한 따라 하기 쉽지 않은 대화의 풍토, 즉 동행숲만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동행숲 살롱에서는 캠페인의 주제를 강조하기보다 개더링이라는 형식을 지켰다. 주제보다 형식에 집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보다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동행숲에서 생태계 보호나 서식지 보전이라는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하는 법은 거의 없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체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곤 한다. 이질적인 대화가 끼어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형식으로 보았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시민들의 정서가 형성되었다. 더불어 사람들의 수용력이 높아지는 듯 보였다. 사람들은 제대로 연결해 주지만 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알아서 성장한다.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나 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행동들을 체감하고 경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동행숲은 홍보 캠페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부 캠페인을 추구한다. 하지만 개더링과 살롱에서 바로 기부를 의식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 역설적이지만 다양성이 증가해야 기부 캠페인이 성공한다. 사람 수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내는 목소리다. 전체 흐름에서 다르게 보이는 잡음도 대화의 일부다. 그렇게 각자의 경험을 서로 대화의 소재로 나눌 수 있을 때, 큰 주제로서 지구를 살리고 서식지를 걱정하는 과제가 누구나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동행숲 캠페인의 문제의식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고와 실천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선 자리에서 친환경 소비, 환경친화적 행동, 생활 속의 서식지 보전 실천, 지구를 살리는 일상적 활동 등을 할 수 있어야 옳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해야 한다. 사람 수를 늘리는 대신 참여자들 사이의 차이와 개성, 개방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때 자유의지에 위한 홍보가 시작되고 기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부모금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나누고,無理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게 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면서 실천하는 일을 찾게 된다고 믿는다.

변방과 이반에 대한 관용

자신이 하는 일을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한 개방성이 높은 환경에선 다양성이 증가한다.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일수록 개성이 강해 보이는데, 그것은 서로의 주장과 발언이 수용되기 때문이다.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인정할 때, 이질적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성을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다.

수많은 색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다른 말로 인정, 존중, 공존이라고 하며, 이런 가치가 살아 숨쉬는 도시가 관용적 도시다. 포용은 이 과정을 거쳐 배제하려는 마음을 없애려는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포용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하는 것으로 소용없다. 사람들이 낯이고, 엮이고, 묶이고, 섞이는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충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사람들 사이의 충돌에 주목해야 한다. 충돌은 융합과 분산을 만든다.

다른 사람을 만나 성장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여 성숙해지고, 이종 간 융합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그날 그 장소의 작은 협동이 성공했다고 느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용적, 관용적, 포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다양성이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지구를 살리는 테마보다, 원탁의 대화에서 사람을 연결하고 자신이 성장하는데 집중하는 스키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순적이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캠페인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지구와 서식지라는 과제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면 살롱과 개더링이 잘 되었을까. 그 주제로만 발표해야 한다면 동물보호운동가, 동물원사육사, 환경보호운동가처럼 생태계 관련 연구자만 발표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동물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물학, 사회학,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동물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간됨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동물원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문학과 사학, 철학 계열의 인문학자가 아니어도, 연구자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라도 발표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지금껏 공개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개방적으로 대화의 장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보여줄 때 문화다양성이 구현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배제 없는 포용

동행숲 캠페인은 생명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서식지 보전이라는 말도 쓰고, 지구살리기라는 말도 쓴다. 즉, 큰 담론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논점과 방점이 다르다. 그래서 캠페인은 날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고, 모인 장소에 따라 중점사항이 달라진다.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원을 비롯한 대공원 전 지역의 경영개선을 고민하면서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공원을 표방했고, 민간 주도의 살림을 하는 거버넌스, 숲을 가꾸는 시민 파트너, 동물원을 지키는 시민참여 서포터즈, 청계산 숲과 동물원을 보존하는 기업기부와 시민모금 민간 스폰서 같은 것을 고민했다. 서울대공원은 복합문화공원이고 다양한 시설이 혼재한 곳이라 생태계를 살리는 과제도 복잡할 터였기에 자원봉사든, 기부모금이든, 민간주도 거버넌스든, 시민참여 플랫폼이든 통합하지 않고 여러 개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어디든 참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또 어떤 것이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공원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플랫폼으로 바꾸어나가고 청년일자리, 주민 일거리, 창조기업을 보육하는 허브기지의 기능, 숲과 동물원 자원을 활용해 소셜벤처가 공익적 임팩트를 증대하는 협업센터 기능, 문화기획자들이 생태계 문제를 개선하는 미션을 달성하는 창의적 실험실 등 여러 가지 말을 써왔다. 그것은 정리되

지 않은 혼란이 아니라, 내가 만나 들었던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발언이었다. 이것을 다 수용하려고 애 쓸수록 서울대공원에 결합되는 시민들의 활동은 풍부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2년 임기 동안 부지런히 300명이 넘는 자문을 경청하고 질문을 던지며 결국 ‘대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뿐 아니라 ‘위대한 숲 프로젝트’, ‘서울 동물원 트러스트’, 그리고 ‘동물이행복한숲’ 등 민간에서 여러 개의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임 후 그중 하나의 시도에 힘을 싣고 몸담게 된 것이 바로 동행숲이다. 그것은 내 개인적 판단, 선택, 결정, 그리고 실천일 뿐이다. 내가 문화다양성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드러내는 존재, 내 개성을 실천하는 실행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나 자신의 머리도 분산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혼란을 겪고 여러 성격이 섞여 있다. 대화의 장은 그런 뒤엉킨 생각을 이리저리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산과 이종의 융합

서울대공원장으로 대화모임을 할 때부터 퇴임 후 동행숲 모임에 참여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대화 속에서 여러 주목과 관심을 넘나들었기에 나 역시 풍부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지구상의 종 다양성을 위해 종 보전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다. 동물원 사육사 등 직원들을 만날 때는 세계적인 희귀동물이나 멸종위기 토종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물보호운동가들을 만나면 동물원을 뜯어 고치거나 폐쇄해나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동물원을 폐쇄한 후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면 쉽게 적응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식지 훼손을 막고 다시 돌아갈 만한 동물의 고향을 만드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동물 종 다양성과 종 보전에 주목하다가, 종 보전을 잘 하려면 우선 숲 보전을 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숲이 살아야 동물들이 사니 서식지 보전 중에서도 산, 삼, 임, 목에 집중하고 난 후 공원과 정원과 농원을 살리자고 마음먹었다. 사막과 숲, 바다에 집중하다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도시 난개발, 수질오염 등 지구 살리기 전체에 필요한 환경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다. 지금도 좋은 분들을 만나 원탁에서 환경친화적 생활과 친환경 경 소비, 생태계 보전과 자연경관의 지혜로운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다양한 분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쯤 되면 개인에게 숲 보전이나 종 보전이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숲이 보전되어야 동물 종이 산다고 해도 다양한 입장을 들으면서 풍부한 시각을 갖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대화에 속하여 살아가는 나 자신이 더욱 개방적인 사람이 되고 사고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생각이 맞고 틀리다는 틀은 깨지고, 누구의 생각이 더 옳다고 느끼기보다 내게 맞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실천은 더 구체적인 것이 된다. 결국 지식동아리, 학습공동체, 연구동호회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들어가 서로를 알아가고 받아들이고 존경하는 가운데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알리기 바빠진다. 내가 속한 이 동행숲은 문화다양성을 가진 도시와 다르지 않다. 그 도시 안에서는 모두가 동행자가 되면 사상과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정서적 살인을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한 일로 정신적 자살을 하지 않는다.

관계의 다각화와 과정의 다변화

문화다양성은 다양하려고 애쓸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누군가의 영감을 스스로 통찰

하고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 이질성을 존중하고 융합하기 위해 공존하게 된다. 분산하더라도 차이가 공존할 수 있다고 여길 때 다양성이 이뤄진다. 문화다양성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개인의 다양성이 아니다. 그보다 사람들 사이 관계가 다각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과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동행숲 모임의 주제는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개성이 공존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동행숲 커뮤니티는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하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자원과 기회의 시각에서 보면, 동물원의 개선이나 폐지나 하는 논쟁, 동물원의 동물을 인기종과 비인기종으로 나누는 문제, 서양인의 눈으로 인기종 동물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다. 반려, 산업, 실험, 야생, 포획, 구조 동물 등 동물문제의 주제 역시 우리의 관심과 시각을 보여주는 표현장치였다. 자생종을 두루 보호할 것인가, 한반도 고유종을 우선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식민지 논쟁에 맞닿아 있다는 주장은 우리의 차이를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했다. 동물을 의인화하는 것이 어린이 교육에 좋지 않고,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것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동물복지에 위배되며 사람에게도 위험하다는 점은 그 연구를 해온 사람을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준다.

만남의 형식 면에서 동행숲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고, 인식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며, 종족과 집단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키우고 기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한 셈이었다. 서식지 보전의 목적보다 지구에 대해 우리 개개인이 갖는 주제의식의 언어를 써야 하고, 생태계 보호를 대상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마다 선 자리에서 어떻게 그 실천을 할 것인지 주체의 언어를 써야 한다는 실험을 한 셈이었다. 동행숲 네트워크는 누군가 동물원 인문학 모임을 만들면 누군가는 동물원 사회학을 위해 자신 있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유로움을 표방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행숲은 수평적 상향적이고, 분산적 쌍방향적이며, 분권적 다원적인 방향을 추구했으나 그것 보다는 인정, 존중, 공존의 감각을 익히고, 수용, 관용, 포용의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방법은 무엇일까?’와 같이 크고 모호한 화두를 던지고, 동물이 온전히 행복한 서식지를 늘이는 일, 그 숲에 인간이 손님이 되는 겸허한 자세를 익히는 일이 동행의 길임을 자연스럽게 동의해나가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동물원 동물과 멸종위기의 토종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사회에 노출된 야생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원탁의 질문에 대해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 면에서 수많은 다른 답변을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만으로도 좋았다. 큰 방향을 함께 보면서 각자가 주어가 되는 실천을 말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문화다양성을 체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션 2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실태와 시사점

발표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토론

안이영노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전 서울대공원장)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실태와 시사점

백선헌

1. 배경

세계적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초 문화 산업이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면서 자국 문화를 지키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정책(다문화정책)이 출발한 관점은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일사회가 분화되었고, 여기서 나타나는 내부적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룰 것이냐는 관점이 주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기존의 다문화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본격화하게 되었다.

서울시 역시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 수는 2007년 207,417명(2.0%)에서 2018년 446,473명 (4.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서남권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였다. 서울은 세계 여러 도시와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집단과 문화가 활발히 나타나는 국제도시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이 점이 수많은 갈등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남권 지역의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이태원클럽에 대한 사회적 냉소, 검찰청 앞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의 대치 등이 상징적인 예이다. 서로 다른 집단과 가치에 대한 불인정은 충돌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문화다양성 증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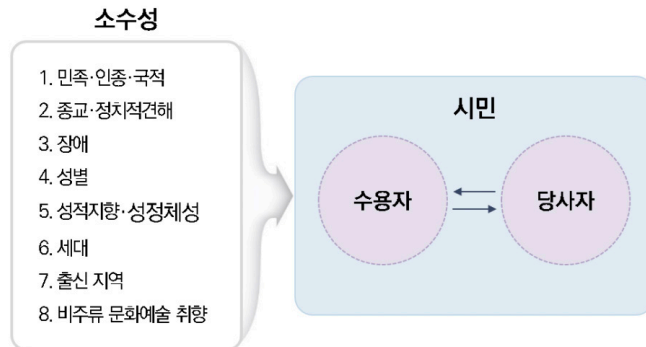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문화기본계획인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포용적 공동체를 목표로 문화다양성 보호전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7년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관련 기본계획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시 문화다양성 시민인식조사 시행을 위한 지표개발과 시범조사를 추진하였다.

2.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기본체계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인식조사는 국민을 문화다양성 수용자로 설정하고 소수자집단, 소수문화, 사회문화갈등 등에 대한 수용도와 포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다. 정부 조사의 경우 세계 비교 및 국내 도시 간 비교 등을 위해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전체 집합으로서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계한다. 이때 문화표현을 단순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단위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에 근거한 실증적 지표가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 조사와 다른 체계의 인식조사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가 서울시의 인식지표체계는 시민을 수용자이자 당사자로 보고 설계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개개인은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과 취향이 있으며 이것이 문화표현으로 표출된다. 서로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것은 갈등과 혐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타인과의 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는 시민 개개인이 문화적 소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에 기인하는 문화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시민을 소수성의 수용자이자 소수성을 갖는 당사자로 설정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소수성은 우리 연구원에서 선행되었던 라도삼 외(201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족·인종·국적, 종교·정치적 견해, 장애, 성별(젠더), 성적지향·성정체성, 세대(연령), 출신지역, 비주류 문화예술 취향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체계의 대상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지표’는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개인적 차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기 평가와 경험에 대한 판단이고, 사회적 차원은 서울시민과 서울시 정책에 대한 판단이다.

개인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내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인지도’, 내가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용도’, 내가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차별경험도’, 나만의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여부와 그 비주류 문화표현을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하는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차원의 지표항목은 서울시민이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을 얼마나 수용하고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와 문화다양성 사업별 필요도를 확인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등 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확정된 인식지표체계는 표1과 같다.

구분	지표항목		세부내용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개인적 차원	인지도	문화다양성 인지도
			문화다양성 연관대상
		수용도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나의 존중도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도
		차별 경험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도(온라인, 오프라인)
			문화표현을 이유로 내가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대응도
			다른 문화표현에 대한 거부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도	비주류 문화표현 보유율
			비주류 문화표현의 표현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존중도
			나의 비주류 문화표현에 대한 요인별 저해도
	사회적 차원	서울시 문화다양성 수용도	다른 집단의 문화표현에 대한 서울시민의 존중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도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별 필요도

<표1.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

3.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는 서울시민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표본설정의 한계로 인해 소수자 집단의 문화표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소수자 집단별 당사자와 전문가(활동가)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84.9%가 인지)이었다. 하지만 문화다양성의 대상을 민족·인종·국가에 한정하여 인식하고, 그 외 성적지향·성정체성, 전통문화, 장애, 소득 등의 요인은 문화다양성의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는 등 인식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수용도가 높았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특히 성소수자집단,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이주노동자 등)에게는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표출하고 있어 실제 수용도는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인식 차원의 수용도와 실제 수용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감수성의 부재가 원인으로 보인다. 소수자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아직 문화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받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환경이며, 소수집단이 어떠한 지점에서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감수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서울시민의 21.2%는 주류에 속하지 않는 문화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본인이 문화적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화표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 무시와 모욕 및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적인 영역에서 정체성 표현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차별까지 이어지는 문화다양성 침해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책 및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오히려 편견이나 선입견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중국동포, 베트남 이주여성 등이 무시와 차별을 피하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5.5%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57.1%가 ‘서울시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소수자 집단 심층인터뷰에서도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요인으로서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점, 수도로서의 지위,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인권 수준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은 높게 평가했지만, ‘소수자 권리와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항목에는 34.7%가,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항에는 34.5%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이는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보다 제도적 구현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민의 70%는 서울시정에 문화다양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은 포용적 사회 발전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소수자 접근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 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4. 시사점

서울시민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문화다양성 수용성과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소수자의 권리와 권익 보장이나 차이에 따른 차별 관련 정책들은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스스로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경우, 문화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소수집단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인식이나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진단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념적 지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과 배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질적 실천도는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수집단 인터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차별과 배제의 지점이 무의식적이거나 무지한 상태이고, 막연한 불안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대상이 인종이나 국적, 장애여부 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누구나 소수성을 가질 수 있기에 소수성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취미나 취향, 주관성 등의 영역까지 문화다양성을 확대하면, 자칫 문화다양성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정책적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외국인 주민, 성소수자, 젠더, 난민 등 문화다양성의 핵심 이슈들이 희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당사자로서 시민의 소수성의 발현과 존중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 가치 하에 소수문화집단에 대한 포용과 공존 문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선헌(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안이영노(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안이영노: 본 연구자료에서 정부가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비교하였다. 서울 시민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제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 국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백선헌: 문화다양성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어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추진한 이유는 서울시민이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인의 문화적 표현이나 가치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다른 집단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을 기초로 하여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때 무게를 실어야 할 부분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소수문화와 그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당사자의 관점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하여 관점의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연구 과제로 남게 된다.

안이영노: 발표자료를 보면 ‘수용자가 아닌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나 조사결과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면 그런 용어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백 연구원님의 조사 접근법과 중앙정부의 조사 접근법의 차이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차이가 문화다양성 면에서 시민들의 논의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백선헌: 문화다양성은 타인의 문화적인 표현을 존중한다. 특히 다문화 사회 속에서 문화표현은 모두가 다 다르다. 하지만 기존의 문화다양성 조사에서는 단일한 속성을 지닌 국민을 설정하고, 그 국민이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들 또는 사회 갈등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관점으로 문화다양성을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국민이 서로 다른 소수문화집단들에 대한 수용도의 변화나 비교를 측정 가능하게 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은 단일한 주체가 아니기에 소수성을 가진 다른 집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서울시민 개인의 속성들을 기초로 하여 세밀하게 관찰되어야 하며, 문화다양성을 소수성을 가진 다른 집단이라는 관점이 아닌 시민을 문화다양성의 수용자이자 동시에 당사자가 된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안이영노: 모든 시민과 국민은 다양한 개인의 표현이 있다는 말보다 모든 시민은 일정 부분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면 자신부터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내용 중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표현을 이유로 다른 사람이 차별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고, 그가 내 이웃일 경우 발언이나 도움을 회피할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는 점은 문화다양성의 인식이 앞서있는 것과 달리 현실의 갭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정책이나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혹은 캠페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백선헌: 맞다. 이 조사 자체는 관련 데이터를 얻는 것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세션 3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점

발표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토론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포용도시와 예술: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점

최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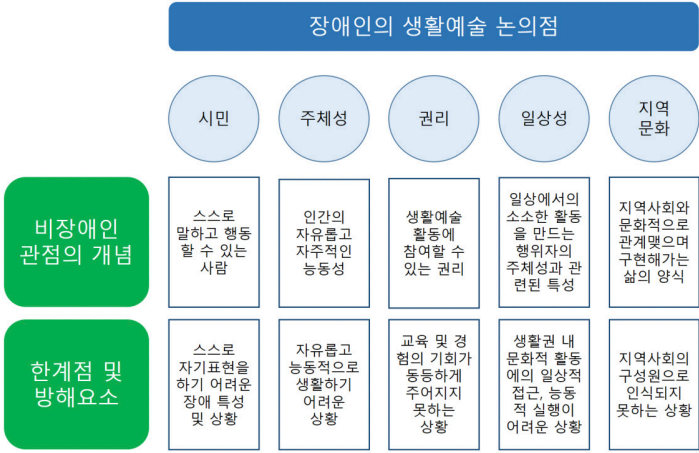
○ 서울시 생활예술 사업 관련 시민의 개념으로부터의 참고¹⁾

- 장애인이 서울시의 시민 중심 문화정책 맥락에서 시민으로 호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논의 가능함.
- 생활예술과 전통적 예술의 가장 큰 개념적 차이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슈임.
-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도시 설계를 위한 추진방향에 있어서 “이제 서울시민이 객석에서 무대로 올라갑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주체로서의 시민의 등장을 강조함. 특히 시민 스스로 문화 감수성을 깨우고 생활 속 문화주체로 서는 것을 생활문화도시의 비전으로 전제하며 이러한 방향성을 재차 드러냄. 이러한 비전은 2017년 추진방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예술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으로 전제되어 있고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자발적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기본권을 누리며 창조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을 생활예술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전략을 제시함.
- 특히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시민을 예술활동 관심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생활예술참여자, 생활예술활동가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세계시민생활예술가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지원전략을 수립함.
- 그러나 장애인은 일반적인 문화활동, 예술활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주체적으로 해나가기 어려워 예술활동 관심자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함.

○ 장애인의 생활예술 관련 논의점

- 장애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대상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예술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시민, 주체성, 권리, 일상성, 지역문화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과 연관된 한계 및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것은 기존의 생활문화 개념이 전제하는 요소가 장애인의 삶 속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거나 의미화될 수 있음을 보여줌. 사회적 불평등, 문화적 경험 기회의 부족 등 일상 속 어려움이 그 해석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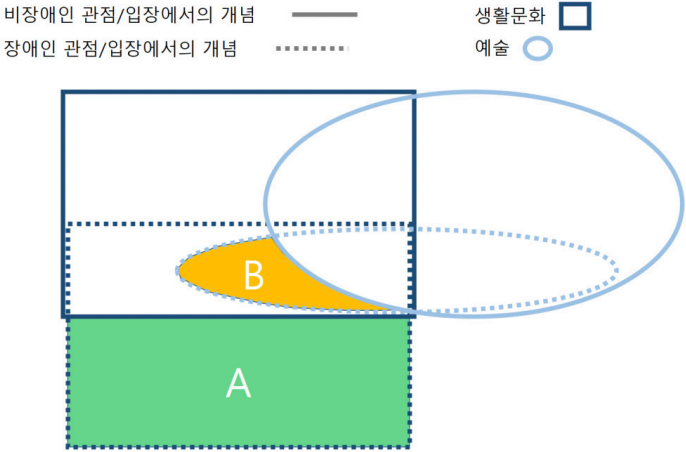
1) 짓거리연구소(대표 최선영),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2019.



장애인의 생활예술 논의점

- 이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 및 입장에 따라 생활예술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생활문화, 예술 개념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음.

A = 비장애인에게는 생활문화 또는 예술로 인지되지 않지만, 장애인에게는 명확히 생활문화의 영역인 것
B = 비장애인에게는 생활문화로 인지되지만, 장애인에게는 예술의 영역인 것



장애인, 비장애인 관점/입장에서의 생활문화, 예술의 관점

- 생활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활동의 가능 범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좁은 장애인은 다른 관점 및 입장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와 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게 됨.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활문화로 보기 힘든 TV시청 등도 생활문화(위 그림에서의 A영역)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 범위가 비장애인에 비해 특히 넓다는 것이 특징임. 또한 비장애인 입장에서 생활문화이면서 예술이 아닌 활동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예술(위 그림에서의 B영역)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아마추어 예술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예술 관련 경험과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술로 해석됨.

○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점

- 위와 같이 장애인의 생활예술 관련 논의점을 바탕으로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가 가능함
- 보통 정보, 시설 접근성이 언급되지만 경험 접근성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함.

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등의 편의 제공 관련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방식의 설명 등
시설 접근성	특정 공간이나 건축물에 사람이 입장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관련	휠체어가 입장 가능한 입구 및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등
경험 접근성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타인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자격 관련. 정보·시설 접근성을 포괄하는 환경 및 인식 관련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활동지원사, 매개자, 보호자 와의 동행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개념이지만 인간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

- ‘경험 접근성’이란 『장애인의 생활예술 활동지원 및 FA 역량 개발방안 연구』를 통해 개념화한 것으로, 장애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타인과 만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생활 전반의 자격을 갖춘 성질을 의미함. 이는 정보 접근성 및 시설 접근성의 개념을 포함하며 보다 일상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즉, 시설과 정보 접근성 관련 장치가 문화공간 등에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장애인 등 소수자의 문화, 예술 접근성이 개개인의 삶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님. 경험 접근성은 활동지원사나 매개자의 동행을 통해 실현 가능한 부분도 있으며 그에 앞서 인간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문화, 예술 접근성 관련 논의점

2016 성북문화재단 문화다양성 사업 ‘평등한 입장, 텅없는 극장’ 최종 원고 (최선영 작성).

**“생후 1년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 엄마가 극장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극장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는 있을까?”**

이 질문은 나에게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나 역시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동네 길가의 턱을 넘으며 장을 보고 놀이터를 오가던 시절이 있었기에, 아이 엄마들이 편히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그것을 위한 시설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 아들은 6살이 되었고 내 손을 잡고 여기저기를 오가지만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공간, 그중에서도 문화공간은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이번 '평등함 입장, 턱없는 극장' 사업의 초반에는, 그것이 어떤 시설들의 부족 때문이라는 전제로 필요한 장치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의 범위는 아직 걷지 못하는 갓난아기부터, 7살 정도의 아이까지로 정했다. 내 아들과의 6년간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 아이에게 정해진 시간에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 엄마, 엄마와 잘 떨어지지 않는 아이를 가진 엄마의 입장으로, 영화관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았다.

...(생략)...

보통 '문화생활'이라고 말하는 공연, 전시, 영화 관람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이나 그 흐름을 소외시키며 해내야 하는 활동으로 전제될 경우, 그 사람은 그 활동을 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문화, 혹은 문화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는 사회적, 공식적 활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못 하는 사람은 소외감이 들고, 그것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것을 해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스스로를 실험해보게 되기도 한다. 이번 인터뷰 중, 오늘은 영화관, 내일은 쇼핑몰,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를 가보는 것이 마치 스스로의 미션 같다는, 한 아이 엄마의 말도 떠오른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삶의 범위와 조건 안에서 해볼 수 있는 문화, 혹은 문화생활은 사실 우리 안에서도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바느질, 독서, 수다모임 같은 것은 너무 소소하거나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문화라는 사회적 개념보다 덜 의미 있거나 혹은 덜 생산적인 것으로. 실제로 개인이 그 덜 생산적이라 여겨지는 활동에 오히려 더 관심과 동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소소한 것이 아닐까'라는 스스로의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다면 기존의 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 대신, 아이 엄마에게 의미화될 수 있는 문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시설의 확보만이 그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아이 엄마의 일상 안에 담긴 사회적 인식과 가사노동의 현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드러내고 공감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것은 어쩌면 매우 정서적인 관계나 소소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기획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와 엄마, 그리고 그 주변의 삶을 소외시키지 않는 문화적 실천 현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문화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적 부담이 되곤 한다. 그 순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턱' 앞에 선 한 사람에게 알아서, 시끄럽지 않게 '턱'을 넘으라고 말한다. 혹은 눈에 보이는 '턱'들은 없었으니 이제 괜찮은 게 아니냐고 묻는다.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을까. 각기 다른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괜찮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려는 타인, 혹은 사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턱'의 높이를 조금씩 낮출 것이다. 우리는 그 '턱'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턱'의 높이를 얼마나 많이 낮출 수 있을지도 아직 모른다.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최혜자(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최혜자: 발표 내용 중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경험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시설접근이라든지 경사로, 차 탈 때의 어려움 해결, 장애인 택시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지만, 일단 정책으로 들어서면 전국에 보편화 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 선생님 말씀처럼 시설접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접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 언어, 만들어내는 상징, 메시지를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자각하며 미세한 시선들을 찾아내는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앞선 안이영노 선생님과 백선훈 선생님의 의견처럼 결국 주체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 또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미세하게 불편한 부분들, 생활문화 정책 혹은 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된 시민들 등 주체의 관점에서 정책이 누군가를, 어떤 계층을 배제하지 않았는지 바라보는 방향이 필요하다. 즉, 지금과 같이 미세하게 자각되는 시선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배제를 배제하는 실천과 탐구가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선영: 사실 저는 일반적인 전문가의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아이를 낳은 이후 일상적으로 활동하거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배제의 범위 안에 들어갔던 것 같다.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문화적이고 정책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문제를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등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나 정책은 시설이나 정보접근성 같은 부분의 개선에만 치우친다. 그러한 개선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삶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주체들이 자신의 정치나 혹은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세션 4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UNESCO)의 실행을 중심으로

발표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토론

최선영 (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과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UNESCO)의 실행을 중심으로

박소현

예술인의 권리: ‘새 예술정책(2018-2022):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보고서로부터

(1) 기본방향 살펴보기

□ 예술지원체계 혁신으로 예술현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예술정책 수립.

- 블랙리스트 사태 및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지원체계 혁신 및 예술현장의 인권 보호.

□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예술정책 수립.

- 자율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이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의 관점에서 예술정책을 재정비하는 일임.

- 예술 창작과 유통, 향유의 전 부문에서 참여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 예술인의 경우 예술 창작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직업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중점을 두어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민주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예술인 창작권’은 예술인이 외부 압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창작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유권으로서 예술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은 물론 생활 안정을 포함하는 직업으로서의 권리(사회권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
- 특히 후자의 사회권 보호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행 예술인 복지 정책을 발판으로 재원과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예술인의 지위를 확립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예술 향유자의 경우 차별 없는 예술 향유를 통한 문화적 권리의 증진에 중점을 두는 예술정책을 수립해야 함.

- 예술인과 예술 향유자 사이에서 예술의 유통을 담당하는 매개부문 인력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도 예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예술 매개인력에 대해서는 세부화된 직업군 조사와 분류가 필요함.
-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 활동 분야나 국제무대 등 활동 공간에 따라 다양한 직무의 직업군이 존재하나 사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매개인력의 경우 단순 양성이나 육성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안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해외 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관련 에이전트 양성에 대해서도 고려.

○ 권리 중심의 예술정책은 예술 관련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시행.

- 지금까지 예술정책은 공연이나 전시, 출판 등 프로젝트 기반으로 공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 '보조금 관리 사업'의 성격이 강하였음.
- 즉, 보조금을 통한 예술(프로젝트)의 진흥이라 요약해 볼 수 있으며, 예술의 창작이나 유통, 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고려는 정책 프로세스에서는 매우 미미했음.
- 이제부터의 예술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 관리 시스템'을 넘어서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과 참여 주체의 권리 보호 관점에서 재설계 필요.

□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술 가치 존중의 예술정책 수립.

○ 예술이 지닌 가치는 본원적 가치로서 심미적 가치, 파생된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렇다고 예술 자체가 가치에 따라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예술 활동은 크든 작든 이 세 가치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효과로서 작동하는 것임.

○ 전통적인 예술지원은 예술의 본원적 가치를 전제로 시장을 통한 예술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 예술시설이나 단체의 운영, 민간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음.

○ 신자유주의 이후 공공부문에 민간경영 기법이 도입되면서 예술에서도 경제적 가치 생산에서 '성과'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음.

-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적용.
-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재정자립도 평가.

○ 민간부문에서는 예술경영이 강조되면서 시장에서의 자생력 강화가 또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됨. 다만 공공과 민간이 직접 경쟁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은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새로운 예술정책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관계 설정을 비롯하여 예술지원에서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구분 등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으로 나누어 그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영리부문의 경우 산업으로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비영리부문의 경우에도 단체 집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의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입체적 지원 방안 마련.

○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지원을 받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가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단순히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 자체의 '자기발전'으로 치닫고 있음.

- 다각화된 지원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이 조성되도록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예술 가치의 확산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예술정책 수립

○ 예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 필요.

-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상호 연대성을 증진하여 공

동체의 다양성을 보호, 발전시키는 예술정책 수립 필요.

- 소수자 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직·간접의 지원을 통해 소수자 예술의 공급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
- 예술의 힘을 활용한 커뮤니티 예술 활동 활성화.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새로운 예술경제 및 생태 형성을 지원.
- 사회혁신, 지역재생 등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 추진.
- 예술치유, 사회통합 등 갈등과 고립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병리현상 치유.

○ 4차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예술정책 수립 필요.

- 기술과 예술의 융합, 메이커스 문화, 예술담론 활성화, 예술분야 R&D 지원 확대.

○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예술정책 필요.

- 남북한의 예술 교류를 시작으로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예술 활동 활성화.

○ 예술 분야 해외 시장 진출과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예술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

- 예술의 시장력과 경쟁력 강화, 국제교류 확대, 예술기반 문화 ODA사업 추진.

*예술지원체계 혁신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이라는 상황에서 촉발되어 예술 참여 주체의 권리 보호와 권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예술정책을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

*‘예술인 창작권’ 개념 제안: 자유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사회권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매개부문 인력의 지위와 권리 보장 포함.

→ 예술분야의 직업적 권리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강조

: 산업 육성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 산업육성의 경우 국가경제에서 매출증대가 우선(GDP에서 문화산업 기여도가 문화산업정책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직업적 권리 및 노동권 보장 이슈는 오랫동안 주변화되거나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환원되어 왔으나 최근 수년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예술노동 개념이 제기되고, 예술인 복지정책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나란히 문화산업 분야의 직업적 권리 보장, 노동권 문제가 함께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기존의 ‘문화예술/문화산업’이라는 정책적 구분이 이 직업적 권리 및 노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할 시점]

→ 그러나 전통적인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넘어서는 예술정책의 과제 해결?

: 직업적 권리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예술생태계 내지 예술산업이라는 정책적 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공적개입을 예술의 경제적 가치(산업적 차원)와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문화향유에서 출발하는)의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의 한계.

기존의 예술산업정책이 ‘창작-유통-향유’라는 가치사슬의 틀 내에서 ‘유통’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에 머물렀던 것과는 차별화된 접근 필요.

‘유통’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산업구조 자체의 구조변동, 이 구조 내에서 예술노동이 정당한 직업적 권리/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지점을 개선하는 공적개입 필요(예술가의 ‘가난’을 복지정책으로만 해소하려는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 예술산업정책과 예술노동정책이 부재한 채 예술인복지정책만 존재하는 상황. 이러한 불균형 하에서 직업적 권리 및 노동권 보장이 가능한가?). [※영비법의 사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면 개정 보기]

*'새 예술정책'의 경우도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을 넘어서는 근본적 전환에 도달하지는 못했음을 인정해야 함.

- 위에서 지적한 문제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된 기술환경의 변화를 극히 제한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으로 소화함.
- 기술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 아이템을 얼마나 예술활동에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 및 노동의 조건에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 및 노동의 조건 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이 결여된 채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답습한 한계 인정.
-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문화산업구조 재편과 확산 속에서 예술노동은 어떻게 재구조화되고 있는가,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은 운영모델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익배분의 위계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미 예술인복지법의 제개정을 촉발해온 예술인들의 희생은 이러한 불공정한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 경고해 왔으나 실질적인 제도변화는 이를 반영해 왔는가. 왜 유네스코의 예술인정책은 디지털환경에 대한 챕터를 더욱 보강해 가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문화산업을 분리한 정책구조(문체부 조직도 참조)는 타당한가.

(2) 유네스코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와 그 이후

□ 1980, 유네스코 몬트리올 회의: 각 사회에서의 문화산업의 위치와 역할 검토

- (1) 문화산업에 의한 문화 확산과 전통적 문화 확산 수단이 일반 대중에 미치는 영향 (2) 매체에 따른 상이한 생산과정과 시장화 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어느 한 과정이 다른 과정을 압도할 수 있는 문제 (3) 일국의 문화창조성, 문화정책성, 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문화산업의 위치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4) 문화산업의 생산양식과 그 상품의 내용 검토 문제(생산, 유통, 시장 등 문화산업의 각 단계의 실질적 기능 검토, 생산양식이 내용에 미치는 영향 규명) (5) 문화산업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산업환경 논의(다국적 문화산업의 양상과 영향 등) (6) 예술가, 창조적 직업 종사자, 연예인 등의 지위 등 논의

- 예술가 등의 지위에 관한 논의

*이들은 문화산업의 초석이고, 창조적 능력이 문화산업의 생산능력을 결정.

- (1) 예술(창조성과 재능)과 산업(대량생산), 문화와 상업 사이의 갈등
- (2) 집단적 창작과정에 내재하는 갈등
- (3) 예술가, 창조적 직업 종사자, 공연예술가들의 보호 문제
- (4) 그들의 자유와 창조력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

→ 이 회의 이후 1980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가 만장일치로 가결됨.

*문화산업의 생산체제 하에서 창조적 예술가들과 공연예술가들의 예술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문 제에 대해 다룸.

[6조 6항]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국가 내지 국제 차원의 입법이 과학기술의 전반적 발전, 대중통신매체의 발달, 예술작품 내지 공연예술품의 기계적 복제 수단의 진보, 대중교육의 확대, 문화산업의 결정적 역할 증대 등에 비해 낙후되어 있다는 일반적 인식 위에서 본 기구 회원국들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 (1) 예술가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유포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를 보상하고 승인 없이 작품이 무단사용, 변경, 유통되지 않도록 저작권을 보호한다.
- (2) 새로운 통신 및 복제 매체의 기술적 발달과 관련된 편견에 대항하여 예술가의 정신적, 물질적 독점권을 가능한 한 보호하는 제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서커스, 종합연예, 인형극을 비롯한 공연예술가들의 권리 확보를 의미한다.
- (3) 새로운 통신 및 복제매체의 기술적 발달과 문화산업으로 인해 야기된 예술가에 대한 편견은 예술가들의 작품 발표와 유포를 돕거나 적절한 직업적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보상할 것.
- (4)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기계적 복제업체를 비롯한 일련의 과학기술상의 변화로 이득을 본 문화산업체 들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작품 발표 및 유포의 기회제공, 작품사용료 지불 등 기타 예술가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의 예술창조 행위를 권장, 자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새로운 기술발전이 예술가의 취업기회나 작품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이를 시정하려는 예술가 혹은 예술인 단체의 노력을 지원할 것.

[오귀스탱 지라르, 1980 몬트리올 회의] 오늘날까지도 일반 대중은 물론 허다한 정치, 행정 당국자들 사이에는 은연중에 예술가에게는 그가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있다. 예술가도 여느 시민, 공산품 발명가,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연간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결코 널리 퍼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태도, 심지어 예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 남몰래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렇다. 예술가란 마치 마술 부리듯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스타이거나, 운 좋게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술가의 삶'을 누리는 행운아이므로 설혹 궁핍 하다 해도 그것은 그의 행운에 따르는 당연한 대가라는 것이다.

막대한 이윤이 걸린 경제적 과정의 일부로서의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당연히 제값을 받아야 할 예술작품에 대해서도 그 보호 및 장려책을 증대시키고, 저작자와 출판사, 프로그램 제작자들 사이의 관계 도(한 개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TV, 영화, 책, 카세트 등 여러 매체에 의해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제작 될 수 있게 된 이 시대에) 궁극적으로 공정거래 정신을 발휘하여 보다 공정한 바탕에서 상업적 형상을 거친 계약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렇게 되면 석유가 한때 제값을 못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 예술적 창조품도 그동안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 2005,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창조산업(CCI)의 구성요소로서 예술 포함

□ 2019,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실행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예술가도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보장되는 일반적인 권리 보장을 정당하게 받아야 함 강조.
-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저작권 보호, 내용의 다양성 보호,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보호 등.
- 예술가 및 창작물의 국제적인 이동성과 유통에 대한 지원과 보호.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 시민권, 노동권, 사회보장의 문제, 성평등,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제도적 보호,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등.

(3) 예술인 권리를 위한 제도 사례: 표준계약서와 불공정 관행 개선에 관하여

■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 분야 및 종수의 증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총 61종에 이르고 있다. 2013년에 방송(2), 대중문화예술(2), 공연예술(2) 분야에서 총 6종의 표준계약서가 제정된 것에서 출발하여, 2014년 영화(2), 방송(3), 출판(7), 저작권(4) 분야에서 16종이 추가되었다. 2015년에는 영화(5), 만화(6) 분야에서 총 11종이, 2017년에는 방송(1) 분야에서 1종이 새로 제정되었다. 2018년에는 대중문화예술(2), 게임(5) 분야에서 총 7종이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대중문화예술(1), 공연예술(2), 미술(11), 애니메이션(4) 분야 등에서 총 18종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이는 초기에 방송, 대중문화예술, 공연예술 분야에 머물렀던 표준계약서가 점차 분야를 확장하면서 그 수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확대는 적용 분야의 확장과 각 분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종수의 확대가 함께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제도적 강제력 강화

표준계약서의 제정 확대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2013년의 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이후 '불공정행위'로 개정)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2014년에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2항에서 서면계약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하고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제1항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의무사항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참조하여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통해서 첫째, 서면계약 의무화 조항(제4조의3)이 신설되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1.[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계약 관련 조항>

이후 2018년 개정을 통해서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권 규정을 신설하고,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권고, 경고 규정 등의 신설로 시정명령 이전의 이행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표준계약서를 이용한 예술인뿐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통해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도 50%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기생충>의 스태프 35명과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는 총 1,15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스태프에게 총 560만원, 제작사에게 총 59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는 촬영 기간(2018년 2~9월)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한다.¹⁾

■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증가 및 사회보험료 연계

2016년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당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 이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업 및 예비 예술인 누계 10,077명을 대상으로 계약 및 저작권, 권익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1) 「표준계약서 작성 '기생충' 사회보험료 1150만원 돌려받았다」, 뉴시스, 2019.6.14.

교육 대상자는 처음부터 창작, 실연, 기술지원이 필요한 현업 종사자는 물론, 관련 협회나 단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 기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사업체 등도 포함해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계약 교육을 수료한 프리랜서 예술인은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교육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저조한 표준계약서 보급률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문화, 방송, 출판, 영화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은 대부분 50%를 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대중문화 분야만이 69.1%로 유일하게 절반 이상의 사용률을 기록했고, 출판(38.6%), 방송 스태프(36.2%), 방송 프로그램 제작(35.3%), 만화 분야(25%) 등은 더 낮았다.

또한 공연예술분야에 한해서 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공공분야에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분야의 사용률이 저조한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공연예술분야 수익배분 지연 등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266건의 신고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인 139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제정이 곧 그 사용이나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²⁾

■ 서면계약 의무화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2019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문화예술 프리랜서 노동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면계약서 작성 비율이 '반드시 작성한다' 47.1%, '작성할 때도 있다' 40.5%, '구두계약으로 진행한다' 11.2%, '구두계약도 하지 않는다' 1.2%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은 87.6%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반드시 작성한다'는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서면계약서 체결 경험이 높다 하더라도 정부 표준계약서 작성 경험은 낮았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부 표준계약서로 계약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혀 없다' 17.9%, '거의 없다' 22.0%, '보통' 34.4%, '종종' 15.9%, '항상' 9.6%였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3.0) 이하인 2.8%였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3.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출판·언론,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가 2.5%로 낮았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와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알고 있고 사용한 적이 있다' 31.8%, '알고 있지만 사용해본 적이 없다' 39.7%, '알지도 못하고 사용한 적도 없다' 28.5%였다. 전체적으로 정부 표준계약서 인지율은 71.5%로 높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 경험은 31.8%로 높지 않은 편이었다.³⁾

2) 「아직도 저조한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국민일보, 2018.10.15.

3)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 『서울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프리랜서의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2019.11.28, p14-16.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프리랜서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면 표준계약서를 의무 적용하고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면접자들은 표준계약서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태조사를 거쳐 평균 보수 수준 등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고, 공공부문이라도 의무 작성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협회와 같이 당사자 조직을 만들고, 프리랜서가 겪은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지원기구를 꾸려야 하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⁴⁾

■ 근로자 개념 없는 표준계약서

2015년 5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었다. 이때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부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사용시 재정지원 확대, 영화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이 법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영화산업계 종사자를 영화의 제작, 수입, 배급, 상영을 업으로 하는 ‘영화업자’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영화근로자’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한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근로자’ 입장에서 ‘영화업자단체’(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 및 ‘영화근로자조합’(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개념 역시 새롭게 정의했다.

이와 같이 ‘영화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정의들은 법정 기본계획과 함께 ‘공정환경 조성’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법체계 구성 및 법률 조항의 신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한 근로자 개념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 구성, 표준보수지침,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등이 반영될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2항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동시에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배제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데 있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다.

4) 「문화예술 프리랜서? 연 석달 수입공백, 계약피해도」, 미디어오늘, 2019.11.28.

제2장 영화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공정환경 조성 <개정 2015. 5. 18.>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6. 5., 2012. 2. 17., 2015. 5. 18., 2016. 2. 3., 2018. 3. 13.>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 6의2. 예술영화 · 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 · 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영상문화의 다양성 · 공공성 증진
-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5., 2013. 3. 23.>

제3조의2(영화노사정협의회)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화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 권장하여야 한다.

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6(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7(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표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정환경 조성 관련 조항>

<예술인 복지법>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참조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으나, 2016년 개정되기 직전 연도에 채택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근로자’ 개념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지위 중 하나로서 ‘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 사용률에서 영화 분야가 단연 높은 점 또한 이러한 법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법적 지위로서 ‘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표준계약서 교육 및 홍보의 한계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및 확장성은 높지 않다. 현재 예술인활동증명을 취득한 예술인의 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표준계약서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의 수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한 재단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하여, 재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확보,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의 다채널화,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해 계약문화에 관한 인식개선과 공론화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 교수), **최선영**(창작그룹 비기자 대표)

최선영: 코로나 발생 이후 디지털 경제의 전환, 플랫폼 경제로서의 전환으로 인해 예술인들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까지 말씀해주셨다. 이러한 의견이 비예술가 혹은 예술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예술인의 입장 혹은 매개자로 등장하는 사람조차도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예술가를 기대하거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기만을 바라는 인식이 많다.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사람들 사이에 “누구에게나 돈을 준다”라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인의 지위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어떤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박소현: 서울문화재단과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술에 대해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현실적으로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어떻게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전에 일종의 ‘에드보커시’라고 할 수 있는 ‘왜 예술에 대한 직업적인 권리 보장이나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들을 정부 기관 혹은 지원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세션 5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조건과 방향

발표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시인)

토론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문화예술과 젠더: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조건과 방향

이성미

1. 문화예술계 미투와 성희롱 성폭력 방지정책의 시행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으로 페미니즘 리부트, 페미니즘 대중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는 2016년 10월 #OO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다. 오타쿠, 문단, 미술계, 디자인계, 사진계, 영화계, 만화계, 출판계 등에서 신인과 예비 예술가에 대한 성폭력이 폭로되었고, 2018년 미투 시기에는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최고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이 폭로되었다. 2019년에는 아르코 비상임 예술위원 후보가 전원 남성인 점이 공론화되면서 결국 후보추천위원부터 후보까지 재공모 과정을 밟았다. 2020년에는 문화재단의 사업과정에서 예술인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여 공론화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예술인 중 프리랜서가 72%인 예술계가 사실 평등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문화예술계 미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문화예술계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의 의미이며 정책 설계의 조건이자 앞으로의 과제이기도 하다.¹⁾

- ① 예술계 내부의 권력구조 가시화
- ② 해결주체로서 OO계라는 공동체 호출
- ③ 프리랜서라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
- ④ 공공 예술정책의 역할 제시
- ⑤ 문화 콘텐츠 생산자로서 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그동안 문화예술계 분야에 맞춘 젠더폭력 방지정책은 전무했지만 2018년부터 문체부는 성폭력 방지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문화예술계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
- ② 예방: 문화예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교육 의무화, 강사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 ③ 예방: 표준계약서 성폭력 방지조항
- ④ 예방: 지원사업 참여시 서약서
- ⑤ 피해자 지원: 문화예술계 전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센터 (든든, 보라, 예술인복지재단)
- ⑥ 사건해결: 국고지원 중단, 지원사업 심사위원 배제
- ⑦ 사건해결: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성폭력분과 추진
- ⑧ 전담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제 신설 (기획조정실)

1) 5가지 제기된 문제의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 참조: 이성미, 『#문화예술계 성폭력 이후,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정책활동의 성과와 한계』,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8.21, p3-10.

2. 성폭력 발생구조와 성 주류화 정책

성폭력은 성차별적 구조 및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때, 결국 성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차별의 개선, 인식의 변화, 조직문화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성 주류화 정책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모든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 과정에 여성과 남성 모두의 관점과 경험을 통합해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자 제도와 문화의 변화, 조직 재구조화, 자원의 재분배 등 전반적 변화를 중시하는 정책'이다²⁾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시작된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 지수와 지표', 정부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통한 '정책결정과 정 참여' 제고, 공직과 정치, 및 공공기관 관리직의 성별 대표성 제고 등이 성 주류화 정책에 해당되며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³⁾

성 주류화 정책은 주로 통계로 제시됨으로써 정책이 정량화된 수치와 비율로 취급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본래 성 주류화 정책은 남성 중심적 관점으로 구축된 문화예술 조직, 의사결정구조, 평가방식, 예술활동 구조 등을 재구조화하고 자원을 재분배하여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별 대표성을 재고하고 성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또한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비율과 함께 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조항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여초집단의 대표성 비율을 오히려 낮춘다든지, 비율은 맞추었으나 여성 위원의 연령은 30대, 남성 위원의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남성 위원의 결정권이 강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는 성 주류화 정책을 정량적으로만 접근했을 때 일어나는 오류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 영향 평가 또한 마찬가지다. 성인지 예산의 총액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책사업 수혜자의 성별을 분석하는 것은 자원이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분배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도구이다. 단지 사업의 여성 수혜자나 참여자 비율이 높다고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보상체계나 불안정성 때문에 시장이 성별화되었거나 성별 직무분리 현상이 일어난 분야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공적 자원이 성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또한 성 주류화 정책 시행으로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합적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3.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의 조건과 방향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종사자 및 문화예술과 문화 산업 생태계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과 향유의 과정과 결과를 포괄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은 첫째,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2) 김양희 외, 「기업 내 남녀 관리자의 리더십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0.

3)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제23조.

4)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 둘째, 문화예술 콘텐츠, 행사, 사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생산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 언급한 문화예술계 미투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문화예술계 성평등정책의 조건과 방향을 살펴보겠다.

(1) 공공부문의 선도적 추진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 방식의 예술활동이 72%를 차지한다는 점,⁵⁾ 문화예술·콘텐츠 기업 중 10인 이하 사업장이 91.6%를 차지한다는 점,⁶⁾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때문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⁷⁾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공연계와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영국, 독일 등 유럽 공연계의 성평등제도 추진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 있다(미국의 시카고 씨어터 스탠더드 CTS와 영국의 로열코트극장 행동강령 Code of Behaviour 제작용정과 추진주체 비교). 예술계 현장은 조합, 노조, 권익단체, 여성조직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적 제도적 특징 및 문화산업 시장구조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성평등정책을 공공부문에서 선도하여 추진하고 이것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또한 공적 기관이 민간의 성평등 추진활동을 지원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2) 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계약 요건 강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성희롱, 노동권,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관련 제도들은 조직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 왔다. 예술계의 안전하고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프리랜서라는 법,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인의 권리침해 구제에 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예술인이 소속조직이 없는 프리랜서이고 예술활동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술창작 현장은 공적인 일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와 같은 시스템이 최소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교육영역에서는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무정형으로 보이는 예술계가 우리에게 공적인 일터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공공부문 지원사업의 참여 기준을 강화하는 것, 서약서/약정서/교부통지서에 성폭력을 교부취소 요건으로 포함하는 것, 민간의 표준계약서에 성폭력을 계약 해지사유로 추가하고 피해구제방법을 약정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 등은 예술계에서 일을 하려면 상호 간에 지켜야 하는 '계약' 사항에 안전한 창작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시켜 예술계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3) 문화예술과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 성평등 교육 시행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정책 또한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계 조건에 따라 공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자 또는 선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예술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를 국민이 향유함으로써 사회의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특수성이 중요하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한 콘텐츠의 창작과 비평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즉 성평등교육으로 예방교육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 예술인에 대한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예술대학의 권력형 성폭력 미투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예술시장은 규모가 작은 편이다. 창작만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술계는 예술가들이 창작실기교육 등 교육직을 겸하게 된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창작자=교육자'라는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창작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후 예술대학생의 창작결과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예술대학생에 대한 성평등교육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강화되어야 한다.

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6) 『2017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8.

7) 김혜인과 이성민 또한 한국 문화예술계 조건의 특성으로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 비율 높음, 프리랜서라는 활동 조건으로 인해 사적,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이 큼,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음"을 꼽고 있다. 김혜인·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4) 문화예술계 권력구조의 성불평등 해소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문화예술계 역시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다. 예술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의 여성비율이 높은 데 비해, 대학 교원의 성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예술대학생의 성비는 예술 공공지원 선정자 성비에서도 역전되는데, 이러한 성비 역전은 직업적 예술계로 진입(데뷔)할 때부터 일어난다. 또한 영화제작현장의 성별 직무분리 현상, 출판 외주노동 시장의 성별화, 여성 지휘자가 거의 없는 클래식 음악계의 유리천장 등은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성별 격차를 보여준다. 아르고 예술위원 성비 공론화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 법인단체 대표자 성비, 콘텐츠산업 사업체 대표자 성비,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고위직 성비 또한 불균형하며, 종사자의 높은 여성 비율이 고위직에는 반영되지 않고 않다.⁸⁾

(5) 문화예술계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에 따른 성 주류화 전략 필요

문화예술계의 의사결정권은 어떤 지위와 역할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분야별, 영역별 세분화된 지표가 필요하다.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국가 성평등 지표에는 없지만 문화예술계에서 공공지원사업, 공모전, 신인상 등 각종 기금과 상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문화예술계의 주요한 결정권을 갖게 되고, 이후 예술계에서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또한 예술창작과 발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누가 맡았는지에 따라 성불평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용의 안무가, 연극의 연출가, 관현악단 지휘자 및 예술감독, 영화의 감독과 촬영감독의 성별 비율 등이 다.

문화예술계 성차별 양상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영화현장 등의 성별 직무분리 등을 조사하면서 성별화된 시장의 저보상 체계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 예술대학생의 수업료가 타 계열에 비해 높는데 비용을 지출하는 영역에서는 여성 성비가 높고,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또는 지원사업)에서 여성 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같이 살펴서 구조적 차별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예술계의 성불평등한 구조를 드러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화지표 및 성인지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4. 문화예술계 성평등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앞서 문화예술계 미투가 공공 예술정책의 역할을 제시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 예술정책이 창작품과 콘텐츠의 생산 및 국민의 향유에 치중해왔다면, 콘텐츠와 예술작품이 생산되고 향유되는 과정이 공정하고, 안전하며, 성평등한 지에 따라서 예술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해 공공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는 뜻이다. 또한 지원한 콘텐츠와 예술작품이 성차별적이지 않은지, 이에 따라 이를 향유하는 국민과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문화재단은 무엇이 우수한 콘텐츠인지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예술인에게 결정권을 분배하고 예술계 내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계 자원을 분배하고, 지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술인들과 일종의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사업자 또는 원청 사업자와 같은 지위에 있기도 하다. 성평등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심사위원 등 위촉직의 성불평등 해소

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분야 성인지 현황 조사 분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9.

- ② 구조적 성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분배
- ③ 사업자 또는 사업위탁자로서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간 성희롱 문제의 해결주체

5. 성평등 문화예술 지원정책 해외 사례⁹⁾

그동안 문화예술지원원은 작품의 '수월성'과 '파급력'을 심사기준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그 수월성과 파급력을 판단하는 심사위원의 성비가 불균형하고 남성 중심 서사에 익숙한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오직 텍스트로만 심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음에 예술지원원은 작품의 '수월성'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드는 동시에 지원기관은 사회가 평등해 지도록 자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해외사례를 소개한다.

스웨덴은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과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개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Swedish Arts Grants Committee)'는 문화예술 공공지원에서 성평등 적용 원칙과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성 주류화 원칙 적용을 위한 4가지 평가기준을 만들었다.

- ① 예술적 평가
- ② 예술 전체, 장르별 성비를 고려한 예술적 평가
- ③ 예술인의 생활과 예술의 질 연관성을 고려한 평가
- ④ 비평적 성 인식의 질을 고려한 평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술적 평가 외에 성비나 예술인의 생활을 고려하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예술기금위원회는 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하는 기관이기도 하며, 3번 기준은 예술인이 육아나 경제적 이유로 예술창작에 집중을 못할 때 질 좋은 작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조건을 고려한 평가이다.

한편 '스웨덴 예술위원회(Sweden Arts Council)'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원신청서에 예술단체는 단체 대표 및 모든 구성원의 성비, 직급별 성비, 특정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 성비와 역할 명시하고 성평등 및 모든 평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술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및 작업에 성평등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적용한 경우, 성평등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우려가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게 되어 있다.¹⁰⁾ 음악과 영화 등 성별격차 현상이 큰 장르의 경우 별도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작곡가, 지휘자, 음악감독의 여성 비율이 2004년 10% 미만이었던 것에서 10년 후에는 35%로 향상되었다. '스웨덴 영화위원회(Sweden Film Institute)'도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1년 여성 영화인 비율이 26%에서 2016년 약 50%로 높아졌다.¹¹⁾

6. 맺으며

문화재단과 아르코 등 예술지원기관은 어떤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가? 또한 예술지원을 통해 예술계에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 문화재단의 예술지원으로 인해 문화예술계의 성불평등한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가 혹은 강화되고 있는가? 문화예술계 미투를 경유하여 문화재단 등 예술지원기관은 이제 이러한 질문에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9) 김혜인·이성민, 「문화정책의 성평등관점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10) 영국 예술위원회 또한 매년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성비도 기재하고 있다.

11)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김영),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18, p63.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시인),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 교수)

박소현: 발표 제일 앞부분에 던지신 “우리가 어떤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가?”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이른바 형평성의 문제이며, 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을 구성하는데 발생하는 성비 문제와 지원받는 예술가나 예술작품의 성비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과 비평의 영역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혹은 성 평등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우고 반영 시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의 구체적인 생각에 대한 보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예술가의 지원문제 관련하여 여쭙어 본다. 재단사업도 그렇지만 결국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란 원리를 내세우면서 보편적인 공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가 평등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면 공적개입을 하는 방식이 여성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지원사업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들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성미: 첫째로, 현재 시행되는 예방교육은 성폭력 관련 법들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패러다임을 확장하여 성 평등 교육 혹은 성 평등한 창작교육, 비평에 관한 교육들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공공지원사업 선정자 등을 통한 교육의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 기회를 성 평등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기존의 작품의 성 평등함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로, 성 불평등한 구조 자체의 개선에 직접 개입하는 스웨덴의 예처럼 예술인들의 성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 격차가 심한 분야에는 집중 개선이 가능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진행된 성폭력 피해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술로 이어가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소현: 국내에서 ‘00계 내 성폭력 운동’ 혹은 ‘반성폭력 운동’들이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졌을 때 이는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활동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가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자 지역마다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연계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토대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성미: 지역 예술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예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협소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 중앙의 지원뿐 아니라 성 평등 의식을 가진 문화재단의 직원이나 예술가, 활동가들을 모을 수 있는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그 광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센터 혹은 사업들을 진행하여 기초재단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북권의 경우, 여러 문화재단이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의지가 있는 한 두 명이 아닌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들의 정책과 지역문화재단들이 모두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흐름들이 필요하다.

세션 6

도시와 예술, 그 안과 밖에서

발표

최도인 ((주)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토론

이원재 ((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도시와 예술: 도시와 예술, 그 안과 밖에서

최도인

도시와 예술, 그 안과 밖에서

(서울문화재단 라운드테이블 [도시와 예술] 발제문)

친애하는 나의 도시

‘친애하는 나의 도시’는 광주 MBC의 기획으로 12월 12일 방영될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다. 3개 도시에 사는 ‘리얼 로컬’이 초대하는 다른 시선의 도시 이야기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눈을 떠 엄마를 만나고, 병원을 만나고, 집을 만나고, 동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버스를 만나고, 도시를 만난다.



장벽이 된 도시

어느 순간 ‘나의 도시’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된다. 내가 살 집을 스스로 구해야 할 때,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할 때, 내 집과 동네가 도시개발로 사라져야 할 때 나는 위축된다. 10년 넘게 살던 나의 집, 나의 가게는 이제 트럭이 다니는 도로가 되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갈등한다. “우리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나요? 개발은 어렵나요?”라는 얘기도 듣는다.

도시가 이론이 될 때, 계획이 될 때, 정치가 될 때, 도시는 나로부터 멀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진다. 그들은 대부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정치인의 이름으로, 행정가의 이름으로, 교수의 이름으로, 전문가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행정, 의회와 더불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등 절차와 과정이 작동한다. 특히 도심부는 강하게 ‘경성 체계’가 작동하면서 삶의 공간을 규정한다.

도시를 말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도시경제학자(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가 승리했다(도시의 승리)’라고 선언한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이자 액티비스트(제인 제이콥스)는 ‘도시는 죽었다(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라고 말한다. 최근 ‘로컬’, ‘골목길’, ‘동네’를 주목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모 카드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을지로, 성수동, 이태원의 소비패턴을 분석한 책을 내고, 골목길 경제학, 로컬 크리에이터를 다루는 책도 등장한다. 이들 중에 소리소문 없이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예술가들이 있다.

도시의 기록자들

“11월의 어느 날 세운상이 동편 보행데크 아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수육, 시루떡, 어묵탕 등 제법 잔치 분위기가 나는 음식들이 가득한 산림동 상인 단합대회 현장이었다. 코로나와 재개발로 어려운 때 흠어지지 말고 함께 잘 이겨내자는 취지의 행사였다. 그리고 사장님들의 호탕한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셔터를 누르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작은 체구의 여성 사진가는 남자 사장님들 사이에서 이질감이 전혀 없었다. 그의 카메라 앞에서 사장님들은 친한 이웃 앞에 선 것처럼 편안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행사장을 누비던 사진가가 2014년부터 청계천 을지로를 7년여 간 담아온 사진가 ‘신희옥’이었기 때문이다.” - 세운맵 인터뷰, 박해란(세운협업지원센터)



사진가 신희옥은 청계천 을지로라는 도시 속 도시를 이렇게 말한다. “사실 굉장히 쉬운 말하면서도 어렵죠. 스스로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뭐가 그냥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 걸이 허름해도 아우라라고 하나요? 그런 게 빛나듯이 이분들은 최상의 것,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무 말을 안 해도 조용한 자신감이 표출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내는 공업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허름한 걸모습에서도 아름다움과 자신감이 막을 수 없이 넘쳐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움이 모여 있기에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삽화가(카툰니스트) 장 자끄 상빠는 ‘파리 스케치’라는 작품집을 통해 파리의 뒷골목과 생활상을 섬세한 터치와 애정의 시선으로 그렸다.

빈민운동가이자 사진가 최인기는 <청계천 사람들, 삶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청계천(리슨투더시티)>이라는 사진 기록집을 통해 청계천 복원 투쟁의 현장을 증언한다.

이렇듯 예술가들은 다양한 시선으로 도시를 기록한다.



나의 도시, 그리고 예술

예술가들에게 도시는 좋은 소재이자 먹잇감이다. 또한 애증의 존재이기도 한 것 같다. 1859년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인물군상을 다뤘다. 뉴욕은 영화의 주요 이야기거리이기도 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두 면의 서울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예술(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왔다. 도시계획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은 필수 요건이 되었고, 안정된 공공재원을 통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고 공연하는 공간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공간은 예술작업을 하는 사람들, 관람객들에게 비교적 안전한 예술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국군병원 부지에 건립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3년 11월 개관)은 작가들의 예술, 전시공간이라는 형식적 틀과 더불어 경복궁 서측과 대면하고 동네와 호흡하는 마당이 되었다. 이런 안전한 공간에서도 ‘외압’으로 인한 전시작품 철수가 벌어진다. 예술은 도시의 특정 권력자에게는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예술로 풍요로운 도시, 예술로 긴장하는 도시

나의 절반의 일터인 세운과 그 동네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공존해왔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슬로우슬로우퀵’이라는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예술공간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 ‘별세계 공간’은 재밌게도 중구청 시장경제과의 지원으로 마련된 건물에 들어와 있다.

“씻가루 냄새 폴폴 나는 을지로가 예술가의 무대로 바뀌고 있다.” 최근 어느 매체의 기사 대목처럼 을지로 일대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약 50여 곳으로 추정되는 이들 공간 중에서 ‘슬로우슬로우퀵’(이하 SSQQ)은 여러모로 독특하다. 뭐하는 곳인지 도통 알기 힘든 이름 때문만이 아니다. 이곳은 굳이 전시공간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진 않지만 전시는 물론 이런저런 행사들이 열리는 ‘다목적 공간’이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형’ 스튜디오를 표방한다. 총 3층 규모의 SSQQ는 는 작가 양소유(참고로 원래 가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또 다른 가명)가 5명의 작가와 운영하고 있다. 방치된 옛 재봉틀공장 건물 중 1층은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용 공간과 식당 및 화원, 공연장으로 구분했고, 천장이 낮고 울림이 좋은 2층은 스크리닝 공간, 3층은 토크프로그램 장소로 주로 활용한다. 건물 전체가 여러 용도에 따라 유연하고 알차게 활용되는 셈이다.“ - 월간지 공간 2016년 11월호

R3028과 같이 지역 공동체와의 공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이 이어지기도 한다.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5351>)

“고 작가는 ‘공해가 야기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 안에 작은 자연을 만들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이곳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를 기점으로 (녹색문화가) 퍼져나갔으면 했다. 물리적으로 땅이 없어 벽면을 활용하면 좋는데 시에서 일몰 연장하면서 상인들 상심이 크다’면서 어느새 높은 빌딩이 들어서 답답해진 이 일대 경관의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이 동네가 옛날에는 건물이 낮아서 주변에 펼쳐진 산이 보였다. 산은 마을의 정원이었을 텐데, 지금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하늘이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다. 2016년만 해도 을지로 4가역을 나오면 남산이 보였다. 돌아서면 북한산이 보였다’라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연을 박탈당한 느낌이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하늘이고 자연인데 그게 막혀 점점 자연과 멀어져가고 있다. 이 공간 안에서 자연을 다시 불러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라는 질문에서 정원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Landscape Times, 2020.05.20.

세운상가 도시재생으로 마련된 세운메이커스큐브 일부 공간에는 기술 상공인들과 협업을 하는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랩’과 같은 예술가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네 기술장인들, 도시 인문학 연구자들과 함께 ‘청계천 광석라디오 탐사대’ 같은 프로젝트를 시도한다.

최근 중구문화재단은 산림동 재개발 연장지역에 있는 한 공장, 주거 복합공간의 3, 4층에 ‘을지아트센터’를 조성하여 개관하였다. 아직 재개발 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적인 시도를 한 것이다. 물론 이곳이 곧 사라질 운명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을지아트센터는 ‘도시계획’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도시생태계, 예술생태계, 지구생태계

가끔 언론을 통해 예술은 도시의 젠트리피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고, 일부 지역 상공인들에게는 우려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예술은 도시와 공존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 미술관, 공연장이라는 이제는 ‘전통적인’ 공간을 버린 ‘예술’은 더욱 도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결된 ‘생태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생태계는 조화로운 곳(만)이 아니라 불편하고 불안한 체계이다. 강한 것이 살아남고, 너무 강해도 사라지는 곳이다. 낮은 곳에서 길게 지속하는 생명체들도 많다. 이 불안한 동거는 도시와 예술의 숙명이다. 돌파할 것이냐 순응할 것이냐는 양자의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배려와 공존의 바람을 품어 본다. 외사랑일지 모르는 친애하는 나의 지구, 나의 도시를 위하여.



최도인(☞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이원재(☞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

이원재: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된 전환도시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구적 위기가 사실은 도시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의 도시에서 예술가들, 작업자들은 어떤 고민과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마지막으로 듣고 싶다.

지금의 도시화는 최근의 코로나19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다양한 재난사회의 행성적 위기 안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도시화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성찰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또한 초기 개발주의, 성장주의에 대한 성찰을 공론화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100년 플랜 등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지형적 도시이자 개발이 빠르게 진행된 서울은 여전히 정글이다. 이런 곳에서 예술이라는 건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과거에는 예술이 도시를 상상하고 계획했다면 지금의 예술은 철저하게 아주 미시화된 기능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고, 예술가 스스로도 사실 매우 종속적이며 도시정글과 그저 공생해온 관계라고 생각한다. 물론 목동의 오아시스 프로젝트나 홍대, 을지로의 프로젝트를 보면 그렇지 않은 순간도 존재하지만, 사실 예술계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운동권 등의 과격한 문제를 배격해왔던 게 주류 서울이라는 도시의 예술 씬이었던 것 같다. 동시에 예술이 도구화된다거나 예술의 가치를 모른다거나 하는 등의 컴플레인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의 주인, 주체로서 예술가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공생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았나, 예술이 그런 권력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상상력을 준 적이 있진 않았나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최도인: 우리가 예술을 정치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방식과 예술가들이 도시에 직면하고 도시 자체를 작품화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한 긴장감을 생성해 왔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비판적인 도시 군상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사례처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 안에서 액티비즘 형태로 예술가들이 펼치는 활동의 논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션 7

재난회복력이 높은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발표

박은선 (리슨투데이시티 대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연구실 연구원)

토론

백선헤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누구도 남겨두지 않도록, 재난도시에서 회복도시로 리슨투더시티 ‘장애포괄 재난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본 장애와 재난

박은선

(리슨투더시티 대표,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환경공간정보 및 방재연구실 연구원)

“재난은 우리 사회에 평상시에 있던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새로운 문제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리슨투더시티의 프로젝트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7년 포항지진을 겪은 장애인들 그리고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을 겪은 노인들, 2020년 코로나 19를 겪은 사람들과 이에 대응해온 NGO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재난에 대해 사고하는 프로젝트이다. 구마모토의 한 인터뷰이는 위와 같이 말하며 재난이란 전혀 특별하지 않고, 그저 일상의 문제가 잘 보이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은 재난의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주위의 소외되고 몹이 없는 사람들이 씁쓸하게도 재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존재가 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회적 약자가 재난 약자가 된다는 사실은 일상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난의 정의는 어떤 자연적 사회적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를 한 지역이나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UNISDR, 2017). 만약 홍수나 지진이 났다 하더라도 인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자연현상이지 재난이 아니다. 즉 재난은 ‘취약성(vulnerabilities)’과 자연적 혹은 사회적 ‘위해요소(hazards)’가 만났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Blaikie, 2009; Eisenman et al., 2009).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 등인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사망률이 현저히 높다(Battle, 2015; Irshad et al., 2011).

2004년 인도양 쓰나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사망률을 정확하게 통계내기 어렵지만 인도네시아 Banda Aceh지역의 한 장애인 학교에서 145명 중 50%가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알려졌다(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2005). 일본 장애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야기시 해안가 주변 도시에서 장애인 사망률은 평균 2.02%로 비장애인의 사망률 0.83%에 비해 약 2.4배 높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던 오나가와촌에서는 장애인 사망률이 15.6%인데 반해 비장애인은 5.9%로 장애인 사망률이 약 2.6배 높았다(Japan Disabilities Forum, 2015).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장애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UNOHCHR)는 2020년 6월 9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장애인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유감을 표했다(OHCHR, 2020). 영국 공공기관인 영국 공공 건강국(Public Health England (PHE)) 발표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18~34세 사람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30배나 높았다(BBC News, 2020).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피해가 막중했다. 2020년 4월까지 현황에서 국내 코로나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전, 2020). 2020년 2월 한국 코로나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청도 대남병원 수용자의 99%인 122명이 감염되었고 4월 12일까지 7명이 사망했다(BBC News Korea, 2020).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 취약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12월 26일에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거주인 114명 중 5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Beminor, 2021).

이는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쩌서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그렇게 높은지, 우리나라에서 재난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필자가 2018~2020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NGO 활동가, 재난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65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쓴 글이며,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재난 관리 사이클(disaster management cycle; 준비 및 대비, 대응, 회복)에서 특히 대비,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년에 발간될 학술논문 및 서적 <재난 도시>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1. 재난 대피

“재난 관리는 역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지만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히노쿠마, 구마모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구마모토의 한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재난 관리는 흐름이라는 말을 했다. 대피에서 회복과정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하지만 재난 취약계층 경우 대부분 흐름이 끊긴다는 사실이다. 재난 직후 주민들이 대피를 하려면 우선 정확한 재난 현황 및 대피 안내를 받아야 하고,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피를 하더라도 대피소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있어야 하고, 대피소로 가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어린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 구조

2017년 포항지진 때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 지체장애인은 대피를 포기했다(Park et al., 2019). 화재나 지진이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포항 지진 당시 17층에 거주하는 근육장애인 남성 A씨의 경우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머리를 숙이고 책상 밑으로 내려가라, 계단을 통해 내려가라 하는 아파트 방송을 듣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중 어느 것도 혼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직장에서 황급히 온 여동생은 A 씨를 업어 엘리베이터로 같이 대피하였다.

“원래 동생이 저를 잘 업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죽기 살기로 했던 거 같아요. 어차피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해보자 하면서 내려갔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지만 뽀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래 죽으나 저리 죽으나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고 했죠.” (A, 포항거주)

뇌병변 장애를 가진 포항지역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B씨의 경우 새벽에 여진 났을 때 활동보조사 선생님 없이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포기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여진이 4.4 정도로 새벽 5시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오래 지속됐어요. 한 일 분 정도 지속되니까 ‘이거 집 무너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허탈한 감정이 들었죠. 그때가 새벽 5시였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활동보조 시간이 하루에 13~14시간 밖에 안되니까 그냥 방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피소로 간다 해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해서 나가서 죽나 안에서 죽나 똑같다는 생각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B, 포항자립생활센터)

재난 정보

대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대피 정보와 알림이다. 그런데 우선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재난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걸음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재난 정보를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일본 장애포럼 활동가는 정확한 통계는 내기 어렵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대피 방송을 듣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한 청각장애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지진이 일어난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지만, 쓰나미 정보를 몰랐다고 하는 청각장애인이 많아요. TV에서도 그런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자막이 100퍼센트가 아닌 거죠. 수화통역 방송도 매우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라다, 일본 장애 포럼)

대피 방송에서 수어 통역이나 자막은 기본적 사항이지만 한국이나 일본 양국 모두 아직까지도 포괄적인 재난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한국은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때 방송에서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장애인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장애 NGO들의 항의로 인해 점차 나아지기는 했지만 2019년 고성 산불 때도 자막이 나오지 않다가 시민들이 항의를 하자 몇 시간 후에 자막 방송을 시작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한국 언론과 정부도 처음에는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시민들과 NGO의 항의로 자막방송을 시작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일본 농아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팩스로 내용을 보내 주거나 자막을 제공하는 일들을 했다.

“저의 경우엔 수화와 문자 둘 다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자막만 있어도 충분하지만, 농인들은 문자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수화 없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주변 농아인들도 왜 자막이나 수화 없냐는 불평불만 많이 나왔죠.” (C, 포항거주)

장애인이 없는 대피소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17년 포항지진의 공통점은 대피소에 장애인이 없었다는 점이다. 장애해방 활동가이자 IL활동가인 아사가 유호상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때 동료들을 응원하고자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대피소는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 요소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내 친구는 몸이 흔들리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겨우겨우 갔더니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정말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이였대요. ‘대피소에 있으면 오히려 죽겠구나’ 싶어서 그곳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피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지 않은 장애인의 집에 삼삼오오 모였다고 했어요.” (유호, 장애해방 활동가)

일본 장애 포럼 활동가 하라다씨는 2011년 동일본 재해 지역에 가서 도움을 줄만한 장애인을 찾았는데 대피소에는 장애인이 없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큰 과제였다고 한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한국의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때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다. 장애인은 대피소에 없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근처의 학교나 공공 체육시설을 지역 대피소로 사용한다. 그런데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장애-비장애 분리 교육을 실시하므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 휠체어를 탄 학생을 위한 시설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장애 포괄적 대피소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의 일반 피난소로 사용되는 소학교와 중학교는 분리교육을 실시하기에 장애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많고, 장애인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피난소가 되면 일반 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화장실을 갈 수 없어요. 그러한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당연히 피난 생활도 할 수 없죠. 장애인

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 속에서 장애인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은 일반 피난소를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가시, 구마모토 학원 대학)

이런 점을 고려해 구마모토 학원대학의 히가시 교수님과 휴먼 네트워크 구마모토의 회원들은 함께 학원대학에 장애포괄 대피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대피소는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피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실제 그곳은 정식 대피소는 아니었으나 700명 정도가 대피해왔고 그중 50~60명이 장애인이었다. 그 후에 히가시 교수와 동료들이 한 일은 대피할 수 없었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었다. 쿠마모토 지진 때에 피난소에 온 사람의 수는 18만 명 정도다. 일본 인구의 8% 정도가 장애인이므로 약 1만 4천 명이 피난소로 가야 했으나, 장애인은 일반 피난소에 갈 수 없기에 결국 자택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해 피해 지역 장애인센터 쿠마모토라는 NGO 네트워크를 만들어 자택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한 피난대책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집에서 피난 중인 장애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아웃리치하는 일을 진행했다.

“그럼 장애인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장애인 중 많은 사람들은 다 쓰러져가는 자기 집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 와서 직접 찾아가 보면 이미 심하게 녹이 슬어서 도저히 이러한 곳에서는 살 수 없을 듯한 곳에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이 혼자서 고립된 상황에 맞닥뜨린 장애인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택에서 피난하고 있는 장애인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무엇을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조사를 행정기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가시, 구마모토 학원대학)

구마모토에는 장애인이 4만 2천 명 정도가 있는데 구마모토시는 9,000명에 대한 안부만 확인했다. 그래서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안부 확인을 요구했으나 시에서 거부했다. 그렇다면 NGO에 명부를 주면 히가시 교수와 장애인권단체에서 직접 안부 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래서 NGO들과 히가시 교수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SOS 전화는 이 번호로 걸어주세요. 장애가 있는 분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라도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시에서 대신 배포해주었다. 지진은 4월에 발생했고 전단지는 7월에 발송되었는데 하루에 전화가 70통 가량 왔다고 한다. 히가시 교수는 근 3년간 재해를 입은 장애인을 지원한 것은 원래 자원봉사자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라는 것이 제공되는데 이 공적 서비스는 재해 발생 시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재해 발생 시를 상정한 체계가 없으니 민간에서 빈틈을 메꿔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히가시 교수는 구마모토 지진 때 NGO들과 민간 활동가들의 헌신적 지원 서비스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것이므로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재해 이후 장애인의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능하지 않는 복지 시스템

일본의 장애인 대책이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지역 민생위원이 장애인 한 명에 대해 도움을 줄 사람에 대한 계획을 짜서 등록하는 등록제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 대피소를 세운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6년 구마모토지진때 이 정책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 재해가 있으면 장애인을 대피소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마모토 지진 당시엔 ‘재해 시 약자 피난 지원제도(災害時要援護者避難支援制度)’가 일절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히노쿠마, 구마모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제도적으로는 지정대피소와 같은 대피소에 먼저 피난하고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복지대피소에 갈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히가시 교수는 이 제도가 기능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명부를 작성하여 장애인을 등록하고 그 장애인을 2명의 주인이 돕는다는 계획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그 계획을 짜는 민생위원이 보통 나이가 너무 많은데 평균 13인의 대피계획을 짜야 한다는 점이 무리라고 보았다. UN이 채택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도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 NGO들이 직접 재난 관리 계획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일본과 한국은 재난 관리에서 사회취약계층은 재난 거버넌스에서 빠져 있다.

2. 재난 대비 및 준비

장애 포괄 재난 교육 및 훈련의 부재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대비 교육 및 훈련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재난 교육이나 훈련은 더 잘 갖춰져 있으나 장애인들을 훈련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2016년 지진이 일어난 구마모토에서도 한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훈련이나 교육은 특별히 없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의 센다이 원전 사건이 발생한 후 도쿄전력이 실시한 훈련에도 장애인과 임산부 등 약자들은 모두 배제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7년 전 규슈의 센다이 원전이 멈춰서 재가동하기에 앞서 대피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노인, 장애인, 임산부는 쏙 빼놓고 대피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이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 재가동을 허가했죠.. 이런 점만 보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후타바 병원에서 44명이 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호, 장애해방 활동가)

“훈련은 역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만 해도 의미가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해도 역시 의미가 없죠. 모두가 함께 체험하는 기회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시마, 구마모토 장애인 상담센터)

일본 장애 포럼에서 2017년 전국 지자체에 ‘방재 가운데 어떻게 장애인을 대하고 있나’ 하는 설문 조사를 했는데, ‘장애인은 소중하다’는 의식은 있지만 장애인까지 감당하기 어렵고, 필요한 전문지식도 부족하여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행정에서 일 년에 한 번 이상 진행하는 방재 훈련에 장애인이 참여하는지 물었더니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역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애초에 참여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수화 통역이 없다든지, 애초에 휠체어에 탄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히라타, 일본 장애 포럼)

한국에서는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장애 시설의 경우 1년에 2번씩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매뉴얼도 잘 비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설 장애인 기관의 경우 재난 대피 훈련을 따로 받거나 재난 대응 매뉴얼을 공유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서울의 노들 장애인 야학, 연세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에서는 리스투더시티와 함께 2019년, 2020년에 재난 교육 및 재난 대비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상상하며,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대피하는 방법 등을 익히는 워크숍이었다. 2020년 대구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를 겪으며 대구 장애 NGO들이 자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섬세하게 제작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울의 노들야학에서도 자체 매뉴얼 및 장애인 개인별 맞춤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자조 공조 협조, 지역과의 연결고리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가 구해주는 게 아니고, 이웃이 구해주고 마을이 구해줘요. (김동훈, 라이프 라인 코리아)”

한국, 일본 양국의 인터뷰이들이 모두 ‘자조, 공조, 협조’의 개념과 ‘지역과의 연결고리’ 개념을 강조했다. 자조(自助)는 스스로 자신을 돕는다는 뜻이고, 공조(公助)는 공적인 형태로 지원한다는 뜻이며, 협조(共助)는 이웃 간에 서로를 도와준다는 뜻이다. 실제 한신 아와지 지진 때 가옥이나 가구에 깔린 사람의 60%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인터뷰이 모두 ‘협조’가 크게 빈약하다는 지적을 했다.

“재난 발생 후 가장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이웃입니다.” (윤정임, 경주 아이쿱)

“이제는 태풍, 지진 등에 만능인 방재대책은 없다는 느낌이어서, 그럼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 편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에 앞서 지역의 연결고리란 것이 그 어떤 훌륭한 방재대책보다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히라타, 일본 장애 포럼)

“공동체가 스스로 도와서 방재력을 키우는 방식이 좀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도 얼굴을 전혀 모르는 것과 얼굴을 알고 인사라도 해본 것이 실제상황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조, 협조, 공조 중에 협조가 제일 약해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서 좀 힘들긴 한데 그게 만들 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또한 인터뷰이들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지역차원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오늘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공포였다. 실제 대형 지진이었던 한신 아와지 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외부와 소통이 없던 장애인들의 생사여부를 아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또 시각장애, 지체장애는 장애 여부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이웃과 고립된다.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된 장애인들은 확인이라도 가능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의 아웃리치(방문지원)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되었죠.” (히노쿠마, 구마모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신 대지진 때 모두가 느낀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웃 주민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예요. 이웃과의 관계성이 있던 사람은 도움을 받았죠. 몸의 반이 마비인 사람이 지진 때 집에 매몰됐는데, 인사를 하며 지내던 이웃이 그가 구조된 사람 중에 없는 것을 보고 찾으러 왔대요. 그가 살려달라고 소리쳤더니 이웃과 사람들이 잔해 속에서 그를 꺼내 주었죠. 그와 반대로 후쿠시마 이와키에서 중증 선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변 이웃과 연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생사여부도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유호, 장애해방 활동가).”

“청각장애인과 관련하여 쿠마모토 지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공조 체제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지진 때 피난소의 위치를 전해 들었는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했는가 등의 조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지역 속에서 청각 장애인은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으니까 협조라는 게 나올 리가 없죠. 그건 역시 청각장애에 대한 몰이해이자 불이해(不理解)라고 할까요. (오노, 구마모토 청각장애인 센터)”

3. 나가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서 재난이라는 소재로 일상의 불평등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가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이다. 아무도 남기지 않고 함께 대피하려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단순히 예술 프로젝트나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쟁과 단일성에 점철된 도시의 삶을 성찰하는 프로젝트이다.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세 가지 기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재난 발생 전후 사회에 일어난 경험을 모으고 기록하며 이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대비 워크숍 및 훈련을 개발한다. 셋째, 재난으로부터 공동체가 빠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위의 세 프로젝트는 모두 리스투더시티가 제작 중인 웹사이트 '회복도시'에 수록될 예정이다. 우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5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가 값지고 의미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결국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인식하는 교육, 비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며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였다.

리스투더시티의 도시 비평 작업과 장애인의 재난대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도시가 가진 고질적인 폭력성 문제는 결국 부동산 만능주의와 비장애인 남성 중심적 도시 계획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양한 형태의 삶과 느린 속도를 거부하는 효율 중심의 도시 시스템에서 장애인은 남겨질 수밖에 없다. 도시의 문제와 자연의 문제는 공통의 공간, 즉 바다, 강, 산, 하늘, 공기, 물처럼 응당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 사유화되는 데서 비롯된다(Harvey, 2007). 도시 공간도 수많은 사람의 삶과 역사가 만들어낸 공동의 자산이므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유화되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장소인 도시공간은 부동산 가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미 없는 곳으로 전락했다. 도시계획은 더 많은 아파트를 짓고, 더 빠른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런 도시에서 경제 가치를 최대화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만 비효율적인 것, 낡은 것, 느린 것 그리고 다른 것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학교에서 장애아를 본적이 거의 없다. 인구의 5%가 장애인이니까 초등학교 1,000명 중 50명 정도는 장애를 가진 아이여야 한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중·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거의 만나지 못할까? 그 이유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여러 형태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청소년은 비장애 학생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입시 경쟁 사회에서 느린 아이를 위해 나의 자녀가 손해를 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자신의 아이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한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몸과 다른 속도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시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옆집에 사는 장애인을 방문해 함께 대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터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재난대비 선진국인 일본은 재난이 발생해도 모두가 잘 대피하리라고 생

각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비책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였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본의 장애·비장애 분리 교육이었다. 일본은 초·중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분리 교육을 시행한다. 분리 교육 방침은 건물의 디자인도 바꾸었다. 장애 학생이 다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램프도 없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난이 발생하면 초·중학교 운동장과 교실을 재난대피소로 이용한다. 그런데 학교 건물 자체가 배리어프리(barrier free)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계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애에 대한 편견 조장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분리되다 보니 장애는 ‘다른 것’,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고정된다. 한편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결국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서로를 도와 대피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웃이 서로 도와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공동체 기반 재난 관리’(Community Based Risk Management)라고 한다(Allen, 2006; Shaw et al., 2011). 하지만 공동체 개념이 사라진 서울같은 도시에서 이런 이상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이웃이 장애인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지인이라도 와서 구출해 주어야 한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적 자본’이 두터운 사람이 재난 시에도 대피 확률이 높다(Aldrich, 2008; Bihari and Ryan, 2012; Hishida and Shaw, 2014).

그러나 장애인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도, 대학 진학률도, 외출하는 빈도 자체도 비장애인보다 확연히 낮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이 두터울 리가 없다. 즉, 우리가 외면해온 일상의 문제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장애인의 학습권, 노동권,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재난 시에 이 문제들은 몇 배로 크게 드러나게 된다. 또한 공동체 개념이 와해된 이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한국 코로나 첫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 30년 넘게 그 시설에 갇혀 있었으며 사망 당시 몸무게가 42kg밖에 되지 않았다. 청도 대남병원 수용자의 대부분인 122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4월 12일까지 7명이 사망했다. 청도 대남병원 사례는 사회와 격리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이 얼마나 질병에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BBC News Korea, 2020). 그런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이미 장애인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활동가들은 이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국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에도 재난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문제’ 정도로 인식한다면 다음에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피해의 양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재난 시에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상의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두텁게 만드는 일은 뛰어난 한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상상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참고문헌

- Aldrich, D.P., 2008. The crucial role of civil society in disaster recovery and Japan's preparedness for emergencies. *Jpn. Aktuell* 3, 81-96.
- Allen, K.M., 2006. Community-based disaster preparedness and climate adaptation: local capacity-building in the Philippines. *Disasters* 30, 81-101.
- Battle, D.E., 2015. Persons with communication disabilities in natural disasters, war, and/or conflict. *Commun. Disord. Q.* 36, 231-240.
- BBC News, 2020. Covid: Learning disability death rates "six times higher." BBC News.
- BBC News Korea, 2020. 코로나19 사망자 집중된 청도대남병원에 관해 알려진 사실 4가지 - BBC News 코리아.
- Beminator, 2021. 장애계, '시설에서 죽어야 하는 사회' 철폐하는 한 해 만들겠다. 비마이너.
- Bihari, M., Ryan, R., 2012.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preparedness for wildfires. *Landsc. Urban Plan.* 106, 253-261. <https://doi.org/10.1016/j.landurbplan.2012.03.011>
- Blaikie, N.W.H., 2009. Designing social research: the logic of anticipation, 2nd ed. ed. Polity Press, Cambridge, UK ; Malden, MA.
- 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2005.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Monitor: DISABILITY AND EARLY TSUNAMI RELIEF EFFORTS IN INDIA, INDONESIA AND THAILAND.
- Eisenman, D.P., Zhou, Q., Ong, M., Asch, S., Glik, D., Long, A., 2009. Variations in Disaster Preparedness by Mental Health, Perceived General Health, and Disability Status. *Disaster Med. Public Health Prep.* 3, 33-41. <https://doi.org/10.1097/DMP.0b013e318193be89>
- Harvey, 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ishida, N., Shaw, R., 2014. Social capital in disaster recovery in japan: an overview, in: *Community Practices for Disaster Risk Reduction in Japan*. Springer, pp. 51-62.
- Irshad, H., Mumtaz, Z., Levay, A., 2011. Long-term gendered consequences of permanent disabilities caused by the 2005 Pakistan earthquake. *Disasters* 36, 452-464. <https://doi.org/10.1111/j.1467-7717.2011.01265.x>
- Japan Disabilities Forum, 2015. The Great Esat Japan Earthquak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OHCHR, 2020. OHCHR | Statement on 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Shaw, R., Ishiwatari, M., Arnold, M., 2011. Community-based disaster risk management.
- UNISDR, 2017. What is Disaster Risk Reduction? - UNISDR [WWW Document]. URL <https://www.unisdr.org/we-are/what-is-drr> (accessed 11.24.17).
- 전근배, 2020.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박은선(리슨투더 시티 대표), 백선희(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희: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 특히 장애인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발제라고 생각한다. 산불 혹은 지진 등의 재난 상황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에 국소적으로 작용이 되어 '나는 대상이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가 재난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은 다른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전환으로의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 차별이나 배제가 훨씬 증폭되어 나타났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 예를 들어 자영업자, 특정 노동자, 예술인, 요양시설 환자 및 종사자, 외국인, 장애인 등이 피해를 과도하게 입는 현상을 간접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나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어있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 공유 바란다.

박은선: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익명성이고 지역관계망은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재난 상황에서는 결국 이웃을 도와주게 되는 모순으로 작용한다. 재난은 크고 빠르게 일어나는 재난과 천천히 일어나는 재난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천천히 일어나는 재난 혹은 후유증이 긴 재난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도시공동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닫혀진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전통적 개념의 사회적 자본과 달리 지금 사회에서는 전국 혹은 특정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망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팬덤, 음악, 공연 등 실존하는 느슨한 공동체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을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백선희: 취향이나 예술을 통해 형성된 느슨한 공동체와 연결망들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더불어 장애 포괄 워크숍 같은 것들이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하는 활동가 혹은 단체들이 있는지, 있다면 그분들과 네트워킹하여 함께 나아가는 공동의 발걸음이 있는지 궁금하다. 보통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려면 규모가 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운동들이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박은선: 이번에 연구했던 주제가 재난 NGO다. 그래서 국내 혹은 일본의 재난 NGO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오로지 재난만 다루는 NGO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통 국제개발을 하는 단체들은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국내 재난이 일어나면 잠깐 와서 도와주는 형태가 많으며, 인권단체들, 장애인 소수 단체들이 재난 발생 시 소수자들이나 난민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드를 전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장애 재난을 전문으로 하는 NGO나 단체들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재난심리 치유하시는 분들과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도움도 받기도 하고 같이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을 입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 하나 논문에서 발견한 점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 국내 법적 제도상 재난기금을 건을 수 있는 희망 브릿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구호성금이 오롯이 재난피해자에게만 가기를 원하고, 재난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나 NGO 단체에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성금 규모가 커져도 이런 NGO들이나 활동가들이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더불어 최근 국내에 들어온 대형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나 세이브더칠드런, 그린피스로 인해 모금시장이 레드오션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큰 NGO들이 모금을 끝낸 후에야 작은 시장에서 모금이 가능하니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다. 대형 NGO에서 유명 연예인을 기용하여 기금을 모으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역할도 분명 다르다. 다만 큰 단체뿐만 아니라 작은 단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합토론



박은선: 고민이 많이 담긴 모든 발제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이성미 대표님께 예비 예술인들이 왜 반성폭력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성미: 예술가는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일반인들 보다 더 가장 깊이 창작품들을 수용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창작을 배우고 예술가로 성장하면서 어떤 콘텐츠든지 체화하고, 그걸 통해서 예술가가 된다. 그래서 콘텐츠의 영향을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정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습해 온 작품들이 과연 성평등한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를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예술인이 생산한 콘텐츠가 사회 전반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비 예술인 교육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분야에 비해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특성이 요구된다. 올해(2020년) 강사법이 통과되면서 학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전에는 예술가로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직업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며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학교의 의무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술가로서 예술계에 진입했을 때 예술 생태계가 안전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성평등하지 않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 예술인에 대한 교육이 성평등한 예술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교육을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박소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성인보다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높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학의 커리큘럼은 이러한 태도나 요구를 충족해줄 만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예술 교육과정 안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교수 혹은 시간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예비 예술가 교육뿐 아니라 실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게 할 것이며, 교수나 강사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작품이나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전통적인 수월성 기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소대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점, 목소리, 표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이 문화재단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술활동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수월성 기준으로 한다면, 수월성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한 구조, 남성중심적인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예술적인 가치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술적인 가치를 일반적인 것처럼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성미: 성평등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창작지원이나 예술 지원은 콘텐츠 작품의 우수성, 즉 결과물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 위기가 심각해져 결과물이 아닌 예술 활동 혹은 과정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보면, 기존의 결과물 위주의 지원이 절대적인 지원이 아님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위촉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그 과정에서만 재단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원을 분배하고 있는 관점이 존재하며, 심사위원의 위촉 단계에서부터 권력이 주어지고 어떤 관점을 지닌 사람에게 심사권을 부여하는지까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단이 자원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예술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야만 다양성을 증진하고, 성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며, 사회적 의제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단의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때, 나의 창작적 관점이 얼마나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가를 증명하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과정에서 성비를 적는다는지, 본인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평등에 기여할 것이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예술환경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고 의제를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예술가들이 같이 생존하고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은선: 재단의 지원사업을 보면 역량평가에 치우쳐져 있고 젠더 혹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과 지원적인 부분으로 분리해 방향이 잘 잡혔으면 좋겠다.

최선영: 예술계 안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주장할 정도로 예술인들의 숫자는 늘고 있지만, 공공성 차원에서나 공동의 논의거리로 이야기를 확장하는 사람들은 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론된 주제들로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지원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연구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수록 또 다시 경쟁을 통해 시대적인 의제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쪽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원사업이나 정책이 다시 하나의 틀이 되어 모두가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가 군도 기존과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대적 의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끔 정책도 그 위치를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지원사업도 시대적 의제를 잘 다루려는 사업을 다시 선정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시대적 이슈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도 안에서 마련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박은선: 코로나가 심각해지니까 각 재단이나 기관들에서 코로나와 예술을 접목하여 ‘코로나와 예술’, ‘코로나와 기금’ 등 행사나 지원사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가 우려가 되었다.

최도인: 새로운 의제가 등장할 때 어느 정도의 정책과 기획 측면에서 자원 배분이 배려되어 도입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예술 안에서 논의할 때 현재 예술과 시대, 예술과 사회적 의제, 예술과 시대적 요소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 안에서 공고해져 있는 장르 안에서의 권력이나 장르 간 담쌓기는 논외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법적인 상위법 체계인 문화예술진흥법상에도 문화예술을 장르적 체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장르적 체계로 인해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금이 배분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증명되기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 주류화 등 사회적 의제를 앞으로 이어나갈 변화들이 있다면, 그에 따른 결과들을 실제적인 결과로서 분명하게 분석하고 증명해나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박소현: 전통적인 장르구분에는 분명 한계도 존재하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장르를 토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그간의 예술지원사업이나 정책들이 설계되어 온 방식을 보면 전통적인 방식을 융합하거나 대체하여 새로운 장르설정을 정책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동시에 이런 방식이 반드시 좋은 영향이나 결과만 낳았느냐는 부분도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술관 연구를 하고 미술사, 미술이론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시 안에서의 미술관, 공연장 같은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들이 시민사회나 도시안에서 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공간을 낡고 권위적인 공간으로만 인식하여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주인이 사라지고, 훨씬 권위적이게 되며, 기존의 가치들을 고수하는 예술 현장들이 시민과 더 거리가 멀어지는 측면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장르와 어떻게 연결시키며 예술가들의 삶의 토대로서 온전히 인식하고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최도인: 장르 체계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현상적으로 장르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지만 한편으로는 장르의 교육체계 안에서 권력화되는 문제 현상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질문자1: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하는 교육 및 인식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나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나?

박은선: 순수미술 측면에서 문화재단이나 아르코를 통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연예 산업, 엔터산업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구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번 '장애여성공감' 단체에서 국가가 만드는 홈페이지나 공보물에 나온 성인지 감수성을 시민들과 함께 찾아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대중문화에 더욱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확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미: 정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미디어, 방송, 언론 등의 사업 영역의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여성위원을 주축으로 성차별적인 표현 등에 관하여 심의에서 제재하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방송, 대중예술, 패션, 웹툰 등의 영역을 지원하는 콘텐츠국 또한 성평등센터 '보라'가 만들어져 방송 작가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 연 100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예술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기 때문에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에서 성차별적인 드라마나 표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있는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박은선: 최근 진행되는 문화재단 전국 네트워킹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혜자: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포럼에 참여하였는데, 정책은 현장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책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유연하고 균형감있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가 어느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또한 장르예술은 그 자체로서의 완성도가 있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코드나 이미지, 상징과 메시지, 표현양식들이 나타내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어디까지 표현이 가능한지 어느정도 결핍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은 서울문화재단같은 곳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를 돌아다니며 사업 현장 검토 시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녀회가 축제 때 국수도 삶는다”라는 답변을 듣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문화적인 어떤 삶과 터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해체해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은선: 안이영노 선생님께선 요즘 생태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안이영노: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세상의 변화된 시스템을 고민하는 건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다양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데부터 시작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자2: 마지막에 느슨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연결망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일상 속 예술화를 실현하는 생활문화의 예시가 떠오른다. 그래서 생활문화도 혹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소외, 배제를 벗어나 개인의 개별성을 넘어 함께 연대를 실현시키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가?

최선영: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어렵긴 하지만 자기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생활문화가 제도화되고 사업들이 생기면서 결국 장르중심의 예술활동을 할 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 간 연대감이 높아지는 공동체로서의 생활문화가 해낼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개별자들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긍정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작용 측면이 사업 차원에서 효과성이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도인: 생활문화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개개인들이 공동체나 생활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태도가 전부 다르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각자의 문화,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문화가 정책화되었을 때, 생활문화를 육성하고 진흥하는 것이 공공선으로서의 정책 지향이나 방향으로는 맞지만 과도하게 정책화 시키는 것에 대해선 경계가 필요하다.

박은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안이영노: 답을 낸다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모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쉬운 언어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느슨하지만 깊은 관계들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혜자: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견해를 말하자면, 느슨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동아리나 동호회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상이나 마을 속에서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은 소통이나 사람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되는 개념들이 뚜렷하다. 느슨한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의 삶들에 개별화되어 있는 삶을 지켜주기도 하고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며, 생활문화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느슨하고 약한 정책, 힘을 뺀 정책으로 설계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선영: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시대적으로 모두 집중해야 하는 의제를 선언해주기를 기대하는데, 현 시대상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모두가 불확실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통해 모두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들과 확실한 것들을 각자의 말로 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 또한 어려움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공감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

박소현: 예술가라고 하는 직업이 원래부터 사회적인 기여를 못하거나 경제적인 시장 내에서 역할이 미비하여 보상이 낮은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어 오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을 환기하고 싶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이라는 오래된 정책 범주의 구분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공유하고 싶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위거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인식의 전환, 실천을 미루어왔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더욱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변화만큼이나 우리가 지닌 오래된 습관들, 정책을 논의할 때 당연하게 다루었던 개념적인 범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식의 물질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왔는지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재구조화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성미: 성평등 젠더 의제가 외부 발표자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는 상황이 성평등 의제가 지닌 위치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젠더 문제를 앞으로도 중요한 의제로 고려하고 활동 인력을 참여시키는 의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또한 앞서 이야기된 장르적 틀, 고정된 사업으로 인해 장르 지원 방식 변화의 어려움, 권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직화되어 있는 지원사업의 체계 자체도 검토를 해야한다.

최도인: 문화예술정책이 다뤄야 할 다양한 의제들이 젠더 뿐 아니라 도시정책, 재난, 기후위기, 생활문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어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박은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전환이라는 의제 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생태에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임과 동시에 책임감의 개념이라고 생

각한다.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과 그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르니 이러한 논의들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조금 더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SFAC정책라운드테이블 온라인 의제 공유회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

MEMO





MEMO





2020 SFAC정책라운드테이블

발행인 김중휘
발행일 2021년 1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기획·진행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
운영·총괄 (주)필더필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전화 02-3290-7195 | 이메일 suggest@sfac.or.kr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 www.sfac.or.kr

본 책자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02-3290-7195)으로 문의 바랍니다.

